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7-01

협동연구 2007-01-1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단과 대응

강신욱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발간사

경제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부문간, 계층간, 집단간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감지되었고, 그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었다. 그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특히 양극화와 관련된 분야별 연구 성과는 빠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따로 떼어 놓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접근만으로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2006년 각 출연연구기관별로 진행되었던 양극화 관련 연구가 2007년에는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른 관련 연구원의 협력 하에 3년에 걸친 협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내용상의 진전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 그 1차 년도의 연구 성과로써 1권의 총괄보고서와 5권의 부문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양극화 개념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정의와 이해를 확립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을 주로 나열하던 기존의 경향에서 더 나아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양극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분석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이 고용에, 고용이 소득분배에, 소득분배가 소비와 재생산에 미치는 연관효과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관관계의 탐색에 협동연구는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전체 협동연구의 진행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이 담당(총괄, 4권)하였고 각 영역의 연구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주현 연구위원(2권)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윤규 연구위원(3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성식 연구위원(5권)이 분야별 책임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6권)에는 많은 해외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이강국 교수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이들 책임연구진들과 그 밖의 모든 참여연구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

물론 협동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일 뿐 우리 연구원이나 기타 협동연구기관이 공식적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참여 연구진들의 노력과 성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3년차 연구에서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원 장 김 용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17-01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단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07-17-02	산업 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07-17-03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07-17-04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17-05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07-17-06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주현 연구위원 윤윤규 연구위원	김성식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	강두용 연구위원 하봉찬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연구위원	신광영 교수 이병훈 교수	이성균 교수 김영미 BK21박사 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	노대명 연구위원 강은정 연구위원 이소정 연구위원	강병구 교수 윤명수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식 연구위원	류방란 연구위원 박병영 연구위원	강태중 교수 남기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강국 교수	최민식 교수 Branko Milanovic 수석연구원	Ozlem Onaran 교수 Gerald Epstein 교수 Arjun Jayadev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제2장 산업 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	10
제1절 머리말	10
제2절 산업 간 양극화	11
제3절 기업 간 양극화	17
제4절 양극화와 중요소생산성	24
제5절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	32
제6절 맺음말	44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46
제1절 머리말	46
제2절 산업구조 변동과 고용의 불균등구조	47
제3절 산업별 임금 불평등도와 임금불평등 분해	55
제4절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67
제5절 취업↔미취업 이행에서의 격차: 산업간·근로자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77

제4장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88
제1절 문제제기	88
제2절 경제위기 이후 가구빈곤률 변화요인 분석	90
제3절 노동이동의 형태와 소득변동	99
제4절 소득분배상의 지위로 본 자영업자의 특성 분석	113
제5절 소비구조의 계층간, 세대간 격차	125
제6절 교육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	136
제5장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146
제1절 머리말	146
제2절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	150
제3절 가정 배경과 학업 성취의 격차	153
제4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경험의 영향력 ...	158
제5절 부모 교육수준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	164
제6절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169
제7절 맺음말	177
참고문헌	180

표 목 차

〈표 2- 1〉 대·중소기업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31
〈표 2- 2〉 산업군별 한중 교역구조	35
〈표 2- 3〉 산업군별 한중 교역의 부가가치 유발 추이	37
〈표 2- 4〉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성장기여	37
〈표 2- 5〉 한중 교역과 업종별 성장률의 분산	39
〈표 2- 6〉 한중 교역과 양극화 지수(제조업 20개 업종 대상)	40
〈표 2- 7〉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격차 ..	41
〈표 2- 8〉 한중 교역과 대·중소기업간 성장 격차	43
〈표 3- 1〉 고용 질의 측정 요소	49
〈표 3- 2〉 고용 질의 변량분석(ANOVA) Post Hoc(Duncan) 검정 결과 ·	52
〈표 3- 3〉 산업별 불평등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 결과(2005년)	61
〈표 3- 4〉 R2 분해를 통한 변수들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 분석	62
〈표 3- 5〉 각 산업별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73
〈표 3- 6〉 각 산업별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74
〈표 3- 7〉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86
〈표 4- 1〉 가구특성별 가구빈곤률(1차 소득 기준)	93
〈표 4- 2〉 기초통계량	94
〈표 4- 3〉 회귀분석결과(MLE)	96
〈표 4- 4〉 가구빈곤률 차이의 요인분해	98
〈표 4-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이동 경험 유무	103
〈표 4- 6〉 4년간 15세 이상 비학생인구의 종사지위 및 취업상태 변화 ·	105
〈표 4- 7〉 노동이동 형태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107

〈표 4- 8〉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	110
〈표 4- 9〉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111
〈표 4-10〉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03~'06)	116
〈표 4-11〉 '03-'06년간 소득분위 변화 경험 가구 비율	118
〈표 4-12〉 '03-'06년간 자영자 입·출과 소득분위 변화	119
〈표 4-13〉 자영진입에 따른 소득분위 상승·하락 가구의 비교	121
〈표 4-14〉 자영진입에 따른 소득분위 상승·하락 가구의 비교	123
〈표 4-15〉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변화 추이	126
〈표 4-16〉 소비비목별 지출탄력성	127
〈표 4-17〉 비목별 소비지출의 분위수 배율 (p90/p10)	131
〈표 4-18〉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지니계수	133
〈표 4-19〉 세대간 양극화 경향의 비목별 유형화	135
〈표 4-20〉 분석 모형 및 변수	139
〈표 4-21〉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비율 (%)	140
〈표 4-22〉 연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 및 그 차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남자 (1998, 2001, 2005)	141
〈표 4-23〉 연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 및 그 차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여자 (1998, 2001, 2005)	143
〈표 5- 1〉 고등학교 진학 경로에 대한 학교 및 학생 변인의 영향력 분석 ·	161
〈표 5- 2〉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한국)	172
〈표 5- 3〉 자녀의 학력별, 부모의 학력별 최초 직업의 사회경제지수 평균값 (한국)	173
〈표 5- 4〉 부모의 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교육 일 경우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의 변화 추세 및 비율	176

그림목차

[그림 2- 1]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3
[그림 2- 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28
[그림 2- 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 (대기업=1)	28
[그림 2- 4] 대·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30
[그림 3- 1] 전산업의 고용 질 분포	49
[그림 3- 2] 산업별 고용의 질 분포	51
[그림 3- 3] 총 소득불평등의 2단계 분해 결과의 추이	75
[그림 3- 4] 각 산업별 소득불평등의 하위집단 분해 결과의 추이	76
[그림 3- 5]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제조업과 서비스업	80
[그림 3- 6]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	81
[그림 3- 7]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6개 산업	82
[그림 3- 8] 일자리이행과정 비교: 저임금 vs 비저임금 근로자	83
[그림 3- 9]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84
[그림 3-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비정규직 경험 여부 ..	84
[그림 4- 1] 전체 표본집단의 소득계층별 연도별 총 노동이동율	102
[그림 4-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과 자영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비교 ·	115
[그림 4- 3] 근로자와 자영자의 분위별 분포확률 변화	117
[그림 4- 4] 소득계층별 선택재 지출 비율(백분율) 차이(P90-P10)	127
[그림 4- 5] 총 소비지출의 분위수 배율 변화 추이(소득 P90/10)	129
[그림 4- 6] 교육수준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매개 모형과 중재 모형	138
[그림 5- 1] 소득 수준에 따른 영어 성적의 격차	155

[그림 5- 2] 아버지 교육 수준에 따른 영어 성적의 격차	156
[그림 5- 3]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도 차이: 중졸이하-대졸이상 ·	165
[그림 5- 4]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도 차이: 고졸-대졸이상	166
[그림 5- 5] 학생 및 학교 변인 투입이후 성취도 차이의 감소 비율: 중졸-대졸	167
[그림 5- 6] 학생 및 학교 변인 투입이후 성취도 차이의 감소 비율: 고졸-대졸	168
[그림 5- 7]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우도비 (Odds Ratio)	171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양극화 논의의 확산과 그 의미

일반적으로 한국경제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몇 요인들을 예로 들자면,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또는 개방, 그리고 양극화이다. 이 가운데 양극화 문제는 다른 도전요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저성장이나 고령화, 세계화와 같은 현상들이 적어도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은 우리 경제의 성장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요인들이 초래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 규범적 가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예컨대 세계화와 개방 그 자체는 무조건 선도 아니고 무조건 악도 아니다. 그러나 양극화란 문제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물론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서만 발현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양극화는 1997년의 경제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양극화 현상은 사회통합이란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진행시켜왔고 1997년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의 성취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지적 담론과 정책 설계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과연 양극화는 존재하는

가, 양극화는 지난 세기의 불평등과 어떻게 다른 현상인가, 양극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극화란 용어는 이제 우리사회의 문제를 표현하는 대표적 용어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처음에는 양극화의 존재 여부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거나, 양극화란 용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경계하던 논자들도 우리사회가 양극화되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 별 이견을 달지 않는 모습이다. 양극화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고 이해되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일상화된 표현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느끼기에 사회에는 무엇인가 돈벌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구분을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을 구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과 지방의 아파트 값을 비교하기도 하며, 고액 연봉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그 자체가 격차의 확인을 예견하는 자의적 문제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목도되는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양극화란 용어가 급속히 확산된 데에는 이러한 격차가 어렵지 않게 체감되는 현실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음지’와 ‘양지’는 항상 존재했었고 빈부의 격차는 고래로 늘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라는 문제가 새롭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는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 사교육비의 증가, 중소기업의 부진 등은 일시적 경기침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나,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우리사회

에서 양극화라고 언급되고 있는 현상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불평등과 양적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2. 양극화 관련 논의의 진전과 한계: 개념과 실증의 문제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양극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각 부문간 격차 확대를 보고하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경향이다. 이 연구들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 집단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그 지표를 통해 본 격차 확대 경향을 보고하는 방식의 논의구조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을 산업 영역으로 한정된 후 산업부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두 부문간의 격차를 생산성 지표를 통해 비교한 후 그것의 확대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논지 전개와 각 단계마다의 선택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때에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특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양극화를 볼 때, 양부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내수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수출부문과의 격차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예로, 산업간 비교에서 IT 위주의 산업과 비IT 위주의 산업의 격차 확대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양 부문의 격차 확대가 왜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되는 양극화 경향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제로

써, 부문간 연관관계에 대한 정합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산업, 기업, 고용, 기술, 소득분배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격차 확대의 문제를 ‘양극화’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려다 보면 개념 정의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정책적 대안이 내포하는 지향점의 불일치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어떤 부분의 격차 확대는 국민경제 외부의 충격에 대한 적응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예를 들어 개방의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적응도 차이), 어떤 경우는 국민경제 내부의 제도변화나 정책적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또 어떤 경우는 외적 충격에 대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과정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신흥 산업과 사양산업), 어떤 경우는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빈부 격차의 축소). 각 분야마다 양극화가 의미하는 바와 양극화 해소의 규범적 가치가 이와 같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 양극화라는 개념의 사용에는 엄밀한 의미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아쉽다는 점이다. 기존의 문헌에서 양극화의 원인으로 주로 거론되었던 것은 세계화, IT 위주의 기술 발달, 중국의 부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작용이었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성장의 효과가 경제·사회 전 부문으로 파급되는 메커니즘(trickle down effect)의 약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에 열거한 요인들의 현황을 제시하는 데에서 머무를 뿐, 실제로 그러한 요인들이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인지, 그러하다면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원인에 대한 정치한 분석 없이 생산되는 정책적 대안이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주요 영역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개별 정책영역에 국한된 연구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연구를 통해 우선 부문간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의 양극화 대책이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를 상쇄하거나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의 논리적, 현실적 인과관계에 대해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짐으로써 분야별 정책의 효과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협동연구가 갖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첫째는 양극화라는 개념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규정하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논자마다 양극화의 의미가 다르다면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현상을 지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양극화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신 특정 영역의 분석에서는 양극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자 하는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그 정의에 근거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제까지 양극화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화 및 개방화,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 격화, IT 위주의 기술발달,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

나,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부문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미흡도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양극화의 확대원인이거나 보다 확대를 막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으로 거론된 요인들 모두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라도 실제로 그 요인들이 우리 경제 사회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양극화의 부문간 연관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소득분배 구조의 불평등 확대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확대와 임금불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용부문에 대한 분석 없이는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도 모든 기업이나 산업에서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의 고용비율이 높은 부문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부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과 고용상황을 연계시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득지위의 변동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용 상 지위의 변동이라는 점에서 부문간 연관관계의 탐구는 앞서 지적한 각 부문의 격차확대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시야를 넓혀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는 더 다양한 영역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어 왔던 양극화 현상들의 효과는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으로 또는 소비구조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이는 다시 문화, 교육, 건강 등의 불평등에 파급효과를 갖는다. 특정 영역의 분배구조 변화가 이제까지 세밀히 관찰되지 못했던 영역으로 어떻게 파급되는지 분석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이 보고서는 3년으로 계획된 협동연구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의 1년차 연구결과이다. 전체 연구결과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며, 이 1권은 이 협동연구에 대한 총괄보고서로써 각 분야별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의 각 장(章)은 실제로 분야별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연구에 해당된다. 각 분야별 연구는 국민경제의 순환구조에 대응하여 개념적으로 생산, 고용, 분배, 소비의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였다. 물론 각 영역에 대해 개별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더라도 앞서 강조한 대로 타 연구영역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탐색이란 문제의식은 전체 협동연구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2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해 분석한 2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간 양극화 현상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과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 그리고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생산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장은 특히 산업 및 기업 성과 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이른바 중국 충격(China Shock)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의 결과 고용구조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3장으로써, 이는 협동연구 보고서 제 3권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산업구조 변화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구조 및 고용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노동자의 임금소득 불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탈산업화(제조업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경향이 고용구조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미취업과 취업 상태 간의 노동시장 이행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근로자 집단 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4장은 소득 및 소비 부문의 불평등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인 4권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적하고 있다. 우선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률 격차가 어떤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노동이동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고,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 이유로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던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지위 변동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분배구조 개선의 정책대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는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분석과 더불어 4장에서는 소비와 건강의 영역으로 분석을 확장하였다. 특히 소비의 격차에 있어서는 소득변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의 효과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라는 요인이 분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격차는 양극화의 효과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이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배경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가 학교교육의 단계에서 어떻게 누적되는지, 교육기관의 분화는 교육기회 획득의 격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부문의 불평등을 생성시

키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다양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5장의 구체적 내용은 협동연구 보고서 제5권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에 제시되어 있다.

본 총괄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협동연구에는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주요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6권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분배 측면에 미치는 효과로만 논의를 국한하더라도 세계화의 영향은 그 경로도 다양하고 효과의 발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권에 포함된 분석내용은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줄 현실적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지혜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양극화 연구의 심화와 체계화, 그리고 확장을 의도한 연구목적은 이상의 연구 성과가 모두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란 현상이 일시적 경기침체의 결과가 아닌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연구진의 판단이 유효한 한, 양극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응방안을 찾는 일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 요약된 이번 1차년도 연구 성과는 그러한 작업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장 산업 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

제1절 머리말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 부문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 양극화를 유발하는 충격으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숙단계로의 진입, 세계화에 따른 무역 확대, 기술 진보 및 제도 변화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충격들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차이들, 예컨대, 산업 및 기업들의 기술 수준 및 규모 차이, 근로자들의 적응 능력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반응함에 있어 선도 부문의 성과가 낙후 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는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산업 양극화 현상을 산업 간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산업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관점이 상이하며, 산업 양극화가 다른 부문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형편이다.

산업 양극화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 양극화는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격차 확대가 지속되어야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논자마다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장기적인 경향은 아니라도 상당한 시기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거나 혹은 격차 확대의 요인이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이 될 경우에 양극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격차의 확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양극화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드러난 산업 양극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산업 간 양극화

1. 문제의 제기

산업양극화는 흔히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의 두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 간 양극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산업을 2~3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경우 특정 산업집단으로의 쏠림 현상에 주목한다. 산업의 구분은 제조업/서비스업, IT산업/비IT산업, 경공업/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내수산업/수출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조업 내에서의 산업 간 양극화 문제로 국한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분석단위가 될 제조업 업종군은 1) 경공업, 중화학공업, 2)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3) 내수제조업, 수출제조업 등이다.

양극화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는 제조업 내 산업 비중, 생산성 및 수익성을 이용하였다. 제조업 내 산업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추세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생산성 및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격차가 확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제조업을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 비중 측면에서 볼 때 경공업 비중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비중이 1991년에는 약 1:2 수준이었는데, 2005년에는 1: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경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중화학공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높았다. 즉,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미세하나마 확대되어 왔다.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노동장비율 격차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노동생산성 격차 변화는 노동장비율 수준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유형자산 증가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종사자 수는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다. 즉,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 노동장비율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분석기간 중 양자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공업의 이익률이 중화학공업보다 낮았다. 1990~2006년의 17년 동안 양자 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는 2.07%포인트였으며, 평균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는 1.64%포인트였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익률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분명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 우려가 높았던 2003년 및 2004년에 수익성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3.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

제조업을 내수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 비중 측면에서 볼 때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그 중간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의 기준에서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기초소재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가장 작다.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변화 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 측면에서 기초소재형 산업이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이 가장 낮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높았다. 그 결과 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이어지는 노동생산성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 산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노동장비율의 격차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장비율 수준은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및 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높는데, 그 절대적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점은 노동장비율의 변화 때문은 아니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초소재형 산업이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의 가장 낮았다. 2003년 및 2004년에는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이익률과 생활관련형 산업의 이익률 격차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

지난 수년 간 제조업 부문 양극화에서 내수/수출 부문 간 양극화가 주

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였다.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면,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부문은 활기를 띠어 양자 간 성과 차이가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이다.

경공업/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구분은 업종 고유의 특성에 의해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구분은 업종 고유의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와 해당 시기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다. 즉, 경제의 구조가 변하고 경쟁우위가 변함에 따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90년 초반까지 의복제조업은 수출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수출제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출비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내수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자동차산업은 1991년에는 수출비율이 13.8%로 내수제조업에 해당되었으나, 2005년에는 수출비율이 40.1%에 달하여 대표적인 수출제조업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을 구분하는 기준시점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하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평균 수출비율보다 높은 업종을 내수제조업, 제조업 평균 수출비율보다 낮은 업종을 수출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산업 비중 측면에서는 사업체를 제외한 종사자,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으로 내수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 비중 변화는 제조업을 경공업/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하거나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내수제조업보다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내수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절대 수준이 수출제조업보다 약간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내수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수출제조업보다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는 양자 간 노동장비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1990~2006년 기간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으로는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으로는 내수제조업이 수출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와 수출 부분의 산업 간 차이가 아니라 기업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내수기업의 수익성이 수출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조업 내 산업 간 성과의 격차 문제를 경공업/중화학공업, 내수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구분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발견되었다.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존재할 경우 생산요소는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여야 전체 경제 및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실제로 경공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나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생산요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일부 확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수익성의 격차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산업 양극화 문제가 널리 제기되었던 2003년 및 2004년에 수익성 격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 비중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보였지만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수와 수출 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요컨대, 현실에서 관찰되는 산업 간 성과의 분명한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고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산업 간 성과 격차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업 비중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런 의미에서의 산업 간 양극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내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반영함에 다름 아니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발전이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그 자체가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산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속한 자원이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나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기업 간 양극화

1. 문제의 제기

여기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산업 양극화 논의에서 초점이 맞추어졌던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념이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격차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하고자 한다. 즉, 산업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자체를 양극화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 간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격차 존재뿐만 아니라 격차의 확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2.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관계

1990년대 이래로 제조업의 사업체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즉,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 임가공 등 대기업의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하던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고용 창출과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여전히 규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제조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매출액의 비중도 1990년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만약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개별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관계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에 대기업의 48.6% 수준에서 2004년에 31.4%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4. 대·중소기업 수익성 격차

2000년대 들어와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주목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자 간 수익성의 격차가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제조업 부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익성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던 2003년 및 2004년에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동시에 높아지거나 동시에 낮아지는 등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5. 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째, 기업의 생산성은 노동장비율(K/L)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동장비율의 변화는 노동(L)과 자본(K)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노동(종사자 수)의 변화 및 자본(유형자산)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했지만 그 변화율은 크지 않았던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은 매우 컸기 때문에 노동장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율은 거의 없는 반면 자본투입의 기여율이 매우 높았으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줄곧 확대된 점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증가율은 높고 노동투입 증가율은 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노동장비율 격차를 확대시켰고 이것이 다시 노동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2002~05년 기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는 증가했지만 그 변화율은 크지 않았으며, 유형자산은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 노동장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크게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중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미약하나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변화 이외의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주도형으로 발전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의 투입 증가는 미미하고 자본의 투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는

다른 요소, 예컨대 연구개발의 성과가 생산성 제고를 가져온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2.9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로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 18조 5,642억 원 중에서 대기업이 78.9%, 중소기업이 10.7%, 벤처기업이 10.4%를 사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셋째, 최근에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일반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나 결제수단(어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소기업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기업의 전통적인 유형의 불공정하도급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결제수단과 관련된 조건들도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납품단가는 곧 적정한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저임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로 이전되고 있음에 따라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 여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납품단가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자본계열사에 대한 차등 대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 예컨대, H자동차는 2003년에 자신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H자동차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바, 2003년 모듈부품 재료가 실제로는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인상 명목으로 9개 차종의 샤시모듈부품의 재료비를 8.5% 인상 지급하여 2006년까지 계열회사인 A사에 1,06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방식 및 수준은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납품단가 수준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방식 및 수준은 하도급 중소기업이 적정한 영업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6. 소결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오랜 기간 동안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하며 2000년대 들어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 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 혹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수준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크다. 흔히 산업 간 양극화라고 지적되는 현상은 산업구조조정 과정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기 변동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실재한다면 이는 경기변동적 요인이나 가격변수의 교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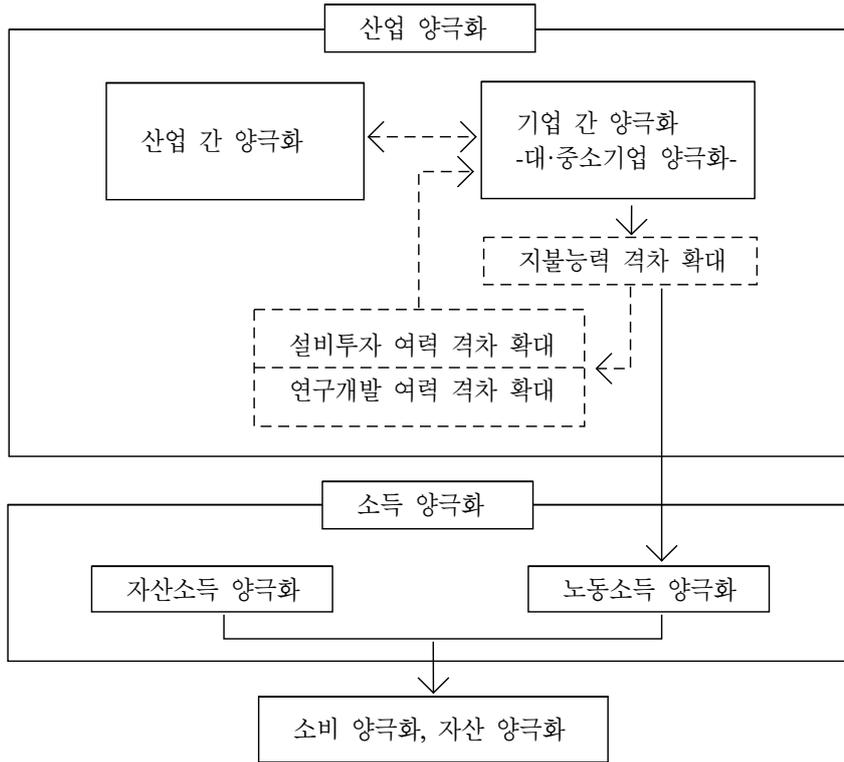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산업 부문의 다양한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림 2-1]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중심으로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해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를 야기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는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대기업은 정규직 남성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을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을 주는 경제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림 2-1]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는 대·중소기업 간 설비투자 여력 및 연구개발투자 여력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양자 간 생산성 및 수익성의 격차를 다시 확대시키는 산업 부문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타 부문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의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설비투자 촉진시책 추진 등이 정책적 대응방향이 될 수 있다.

제4절 양극화와 총요소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의 의미

본고에서는 제조업 양극화의 한 현상 혹은 그 원인으로서의 생산성이라는 연구주제 하에 제조업 업종 간 양극화 및 기업규모 간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의거하여 투입과 산출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업종 간 또는 기업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들 간의 자본투입 행태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노동생산성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이 보다 적절한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추세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양의 증가율을 보였다.

2. 산업 간 양극화와 총요소생산성

가. 제조업 중분류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개별 산업별로 1994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빠른 업종은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1.90%), 화합물 및 화학제품(1.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2%) 등이었고, 느린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0.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0.0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0.02%) 등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반대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등이다.

산출증가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종전에는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 투입이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매우 약해졌다.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와 산출 증가의 뚜렷한 상관관계 역시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요소로부터의 기여도는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경공업, 중화학공업 간 총요소생산성 차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상대적인 비중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에서의 산출 비중은 1993년에 29%였으나 2005년에는 19%로 감소하였고, 자본 비중도 1993년에 23%에서 2005년에 17%로 감소하였으며, 노동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32%로 감소하였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대비 노동생산성 수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1998년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자본투입의 증가와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 확대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의 경우가 경공업에 비하여

전 기간에 걸쳐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본 및 노동투입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다.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 차이

제조업 내 업종을 수출비율이 증가하는 산업과 감소하는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출, 자본, 노동 등에서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전반적인 추세는 수출비율이 감소한 산업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비율증가산업의 경우 산출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소투입증가 속도가 자본을 중심으로 매우 더딘 편이므로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율유지산업의 경우는 1994~97년과 2000~05년을 비교할 때 자본기여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노동기여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1994~97년 기간동안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수출비율증가산업과 거의 동일했으나 2000~05년에는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수출증가산업과 대비된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수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기업규모에 대한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생산요소의 투입, 산출의 결정 등에 있어 규모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 기업규모와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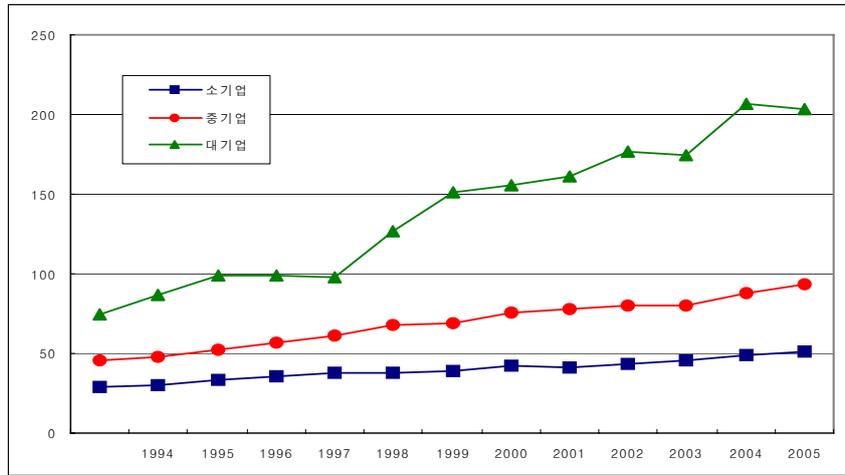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그림 2-2]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2005년 기간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조금씩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별로는 기업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컸으나, 1996년과 1997년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되어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다. 2001년 이후로는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수익성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같은 정도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설명한 대기업 노동생산성 기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그림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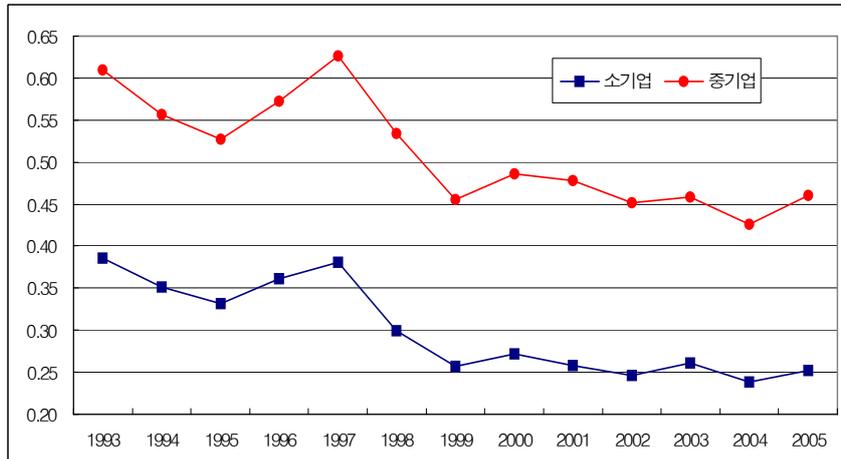
2000년대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성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극화의 현상 중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원인으로서 생산성 비교는 설명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백만원/명)



[그림 2-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 (대기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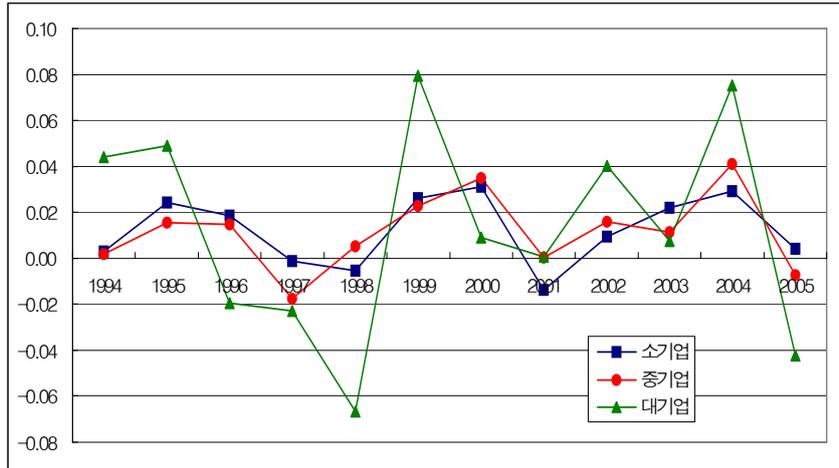
나. 기업규모와 총요소생산성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자본투입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각종 투자 지원제도 및 투자행태가 명백히 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의 단순비교는 실제 생산성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에서의 양극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4] 및 <표 2-1>은 대·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행태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화 외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1994~97년의 기간과 2000~05년의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요소 투입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산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4] 대·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변화 추세를 비교해 볼 때, 외환위기 기간 동안의 인위적인 조정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처럼 외환위기 이전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하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기 힘들다. 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는 2000년대에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표 2-1〉 대·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994~1997	2000~2005	1994~2005
소기업	0.0732	0.1000	0.0775
중기업	0.0599	0.0900	0.0699
대기업	0.0616	0.0914	0.0673

4. 양극화와 생산성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양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산업의 관점에서도 양극화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이처럼 양극화의 문제는 분야의 다양성 및 범위에서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통일된 접근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으로 대응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라는 개념의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기업의 성과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내지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요인 외에도 시장지배력, 거시적 경제환경, 정부의 정책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파악은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익률로 파악된 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비교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현·조덕희(2006)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차이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지적되었던 2002~04년에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수익률 차이와는 반대로 동 기간에서의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에서의 차이는 그다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오히려 양극화 문제가 지적된 2002~04년에는 거의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도 동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차이 및 생산성 차이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현재의 수익률 격차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비경제적 요인 및 거시적, 정책적 차이에 의한 격차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

1. 서 - 한중 교역에 주목하는 이유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 양극화 현상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한중 간 교역과 양극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한중 교역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부분이 최근의 산업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변수는 최근의 한국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한중 교역은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는 한중 관계 변화 추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다.

둘째로 한국의 대외교역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교역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대국의 하나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한중 교역의 위치나 높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중 교역은 한국의 대외교역상의 변화 추이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교역은 산업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교역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에 비해서도 산업별 양상이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특히 교역의 산업별 구조의 측면에서 한중 교역은 전체 교역의 산업별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체 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집약적으로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한중 교역은 교역의 측면에서나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최근 한국의 산업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산업 양극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전체 교역보다 오히려 한중 교역에 주목하는 것이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한중 교역이 한국의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가. 한중 교역의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방법

한중 교역과 한국 산업의 양극화 내지 산업 간 격차 확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 교역이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산업의 대중 순수출(수출 - 수입) 규모는 일차적으로 한중 간 교역에 의하여 창출되는 한국의 해당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에 해당한다. 한중 간 교역에 의하여 창출되는 이같은 최종수요는 다시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산업의 대중 교역은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별 대중 교역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이처럼 개별 산업의 대중 교역으로부터 창출되는 각 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의 연도별 추정치와 실제 산업별 부가가치 총액 자료를 이용하면, 한중 교역의 과급효과에 의한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구한 산업별 추정치를 토대로 한중 교역이 산업별로 어느 정도 상반된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실제 산업 간 격차 변화에 어느 만큼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교역과 산업 간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산업 간 양극화의 개념과 지표

산업 양극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주로 서로 대응되는 산업군의 쌍(pair)의 성장률 격차를 통해 양극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군들은 흔히 논의 대상이 되는 서로 대응 관계를 갖는 산업군들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보조적인 지표로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 주요 산업군들 및 개별 업종들의 성장률 분산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비교적 동질적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들 간에는 부가가치의 분포를 토대로 한 양극화 관련 지수를 통해서도 양극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산업 양극화에 속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산업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업규모 간 양극화(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측면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3.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한중 교역은 이처럼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는 점 이외에도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중국의 높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한중 교역의 빠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교역은 산업군별로 대조적인 교역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는다.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구조를 살펴보면 일차산품 및 음식료(이하 '농수산물'이라 함)이나 경공업 부문은 무역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화학 부문은 큰 규모의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을 소비재/생산재로 구분한다면, 대체로 소비재 부문은 무역적자를 보이는 업종이 많고 반면 중간재나 자본재업종은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산업군별 한중 교역구조

산업군별	2000~06		2000~06	
	평균수지(백만달러)	수지평균증가율(%)	평균무역특화지수	
1차산품 및 음식료	- 3,173	9.0*	-	0.63
제조업	15,765	18.7		0.26
(경공업)	- 1,852	- **	-	0.11
(중화학공업)	17,616	27.2		0.35
(부품소재)	8,420	12.5		0.32
(기계류)	6,624	45.2		0.32

주: 1) 제조업은 음식료 제외 (이하 동일)

2) * : 기간중 무역적자 확대, ** : 기간중 무역흑자→적자 전환

4.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

한중 교역의 과급효과에 의한 전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은 2000~06년 평균으로 약 13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이는 동 기간 중 전 산업 부가가치의 2.2%에 해당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중교역 규모의 급증을 반영하여 2000~06년 간 연평균 47%의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06년 간 한중 교역의 과급효과는 경제성장에 연평균 약 0.7%p 정도의 성장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 중 전 산업 성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산업군별로 보면 한중 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반영하여, 부가가치 유발액이 산업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역재가 주로 속해 있는 제조업 부문이 2000~06년 평균 약 11조원(동 기간 중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6.7%)으로 유발액이 크고, 주로 비교역재인 서비스는 산업연관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로서 약 4조원(1.4%)이 유발되었으며, 반면 한중 교역에서 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1차 산업 및 음식료부문은 -2.4조원(-6.3%)으로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도 부문별로 차이가 커서 중화학부문이나 부품소재, 기계류 업종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인 반면, 무역적자 상태인 경공업 부문은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2-3〉 산업군별 한중 교역의 부가가치 유발 추이

(단위: 십억원(2000년 불변가격), %)

산업군별 부가가치 유발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평균	평균 증가율
1차+음식료	-2159	-2146	-2439	-2459	-2223	-2818	-2274	-2360	0.9
제조업	3763	4469	6196	11186	14305	19786	19402	11301	31.4
(경공업)	506	328	-79	-54	-496	-749	-1362	-273	-
(중화학)	3257	4141	6275	11240	14802	20535	20765	11574	36.2
(부품소재)	2386	2929	3666	5680	6904	10751	10114	6061	27.2
(기계류)	405	673	2263	4859	6852	8393	8860	4615	67.3
서비스	707	951	1702	3782	5265	7454	7360	3889	47.8

〈표 2-4〉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성장기여

성장기여도(%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평균
1차+음식료	-2.00	0.03	-0.76	-0.05	0.66	-1.57	1.43	-0.05
제조업	0.27	0.50	1.20	3.32	2.02	3.16	-0.19	1.77
(경공업)	-0.73	-0.86	-2.09	0.12	-2.31	-1.38	-3.54	-1.56
(중화학)	0.47	0.73	1.72	3.83	2.64	3.70	0.13	2.29
(부품소재)	0.68	0.89	1.18	3.33	1.96	5.27	-0.71	2.01
(기계류)	0.34	0.56	3.25	4.71	3.52	2.40	0.64	2.74
서비스	-0.02	0.10	0.28	0.72	0.51	0.74	-0.03	0.44

성장기여도 역시 중화학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아 2000~06년 평균으로 2%p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고 제조업 전체로는 약 1.8%p, 서비스업은 0.4%p 정도의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차 산업과 경공업 부문에서는 각각 약 -0.1%p, -1.6%p의 負의 성장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여율로 볼 때 경공업 부문에 대한 성장감소기여율은 약 50%

에 육박하여 한중 교역 파급효과가 동 부문의 침체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5. 한중 교역이 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가. 산업 성장률 분포와 한중 교역의 기여도 분포

한중 교역과 산업 간 격차의 관계는 먼저 1차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산업의 4대 산업 부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중 교역 효과는 이들 산업간의 성장률 격차를 뚜렷이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산업별 성장률의 순위와 한중 교역 성장기여도 크기의 산업별 순위가 정확히 일치하여, 한중 교역 효과는 성장세가 높은 산업일수록 그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산업에 대해서는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중 교역의 산업 간 성장 격차 확대 효과를 산업별 성장률 분포의 분산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상기 4대 산업부문과 33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한중 교역 효과는 4대 산업부문의 성장률 분산을 약 2배 정도 증가시키고, 33개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분산을 약 1.3배 확대시켜 역시 산업간 성장률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한중 교역과 업종별 성장률의 분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4대 부문	실제성장률(A)	55.0	25.7	23.4	25.1	63.8	89.8	29.6	27.1
	한중교역 기여								
	차감 성장률(B)	43.5	20.6	23.1	13.3	36.7	51.5	26.6	13.4
	A/B (%)	126.4	125.1	101.6	189.0	173.6	174.5	111.0	201.9
33개 세부업종	실제성장률(A)	215.0	79.4	134.8	37.3	128.1	325.2	35.6	39.6
	한중교역 기여								
	차감 성장률(B)	219.8	71.2	127.2	37.1	155.7	317.8	42.4	31.2
	A/B (%)	97.8	111.6	106.0	100.5	82.2	102.3	83.9	126.7

주: 4대 부문은 1차산업(음식료제조업 포함),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업

나. 양극화 지수를 통해 본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

한편 서로 비교적 동질적인 업종들 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양극화 논의에서 사용되는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조업 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 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의 하나인 Wolfson 지수를 구해 본 결과, 역시 한중 교역 파급효과는 Wolfson 지수값을 약 1.1배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한중 교역과 양극화 지수(제조업 20개 업종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Wolfson 지수	실제부가가치(A)	0.33	0.37	0.35	0.38	0.46	0.56	0.62	0.43
	한중교역 효과 차감부가가치(B)	0.32	0.34	0.31	0.33	0.42	0.51	0.54	0.39
	A/B (%)	103.28	109.95	111.15	114.67	111.17	111.10	114.63	111.24
지니 계수	실제부가가치(A)	0.39	0.40	0.39	0.41	0.44	0.50	0.52	0.44
	한중교역 효과 차감부가가치(B)	0.39	0.40	0.38	0.39	0.43	0.49	0.51	0.43
	A/B (%)	101.18	102.06	103.76	104.08	102.37	102.15	101.65	102.83

다. 주요 대응 산업군별 양극화와 한중 교역

다음으로 산업 간 양극화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부문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혹은 중화학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 등 서로 대비되는 산업군들 간의 성장률 격차를 통해서 한중 교역과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교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 간의 격차확대를 통해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내용의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한중 교역은 2000~06년 평균으로 제조업·서비스 간 성장격차에 약 41%, 중화학·경공업 간 격차에 약 32%, 농림·비농림 간 격차에 약 15%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교역에 의한 성장 격차 확대의 기여도는 중화학·경공업 부문 간에서 가장 크지만(2000~06년 평균 기여도 격차 약 3.9%p), 양 부문 간 실제 성장률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여율은 제조업·서비스 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제조업·서비스 간 내지 중화학·경공업 간 격차에 있어서는 한중 교역 효과가 이들 산업군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7〉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격차

① 제조업·서비스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제조업(A)	1.93	4.45	2.73	12.39	14.48	8.78	7.35
	서비스(B)	5.22	8.73	1.44	1.74	3.31	4.29	4.09
	격차(A-B)	-3.29	-4.28	1.28	10.65	11.17	4.49	3.26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제조업(C)	0.50	1.20	3.33	2.03	3.17	-0.19	1.77
	서비스(D)	0.10	0.28	0.72	0.51	0.74	-0.03	0.44
	격차(C-D)	0.40	0.92	2.61	1.52	2.43	-0.16	1.34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12.29	-21.48	203.35	14.26	21.76	-3.64	40.99

② 중화학·경공업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중화학(A)	3.34	4.33	4.21	14.74	16.84	9.79	8.75
	경공업(B)	-6.25	5.21	-6.66	-4.23	-5.48	-1.79	-3.28
	격차(A-B)	9.59	-0.88	10.88	18.97	22.32	11.58	12.03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중화학(C)	0.74	1.72	3.84	2.64	3.71	0.13	2.30
	경공업(D)	-0.86	-2.09	0.12	-2.31	-1.38	-3.54	-1.56
	격차(C-D)	1.59	3.81	3.71	4.96	5.09	3.67	3.85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16.61	-433.35	34.15	26.12	22.79	31.68	32.04

③ 농림·비농림 부문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1차산업(A)	2.19	-2.82	-4.23	6.12	0.20	-1.26	-0.02
	비농림(B)	4.04	7.22	1.88	5.42	7.42	6.05	5.32
	격차(A-B)	-1.85	-10.04	-6.12	0.71	-7.22	-7.32	-5.35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1차산업(C)	0.03	-0.76	-0.05	0.66	-1.57	1.43	-0.05
	비농림(D)	0.21	0.51	1.36	0.85	1.35	-0.09	0.78
	격차(C-D)	-0.17	-1.27	-1.41	-0.19	-2.91	1.52	-0.83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9.29	12.66	23.11	-26.46	40.36	-20.80	15.51

라. 기업 간 양극화와 한중 교역 효과

여기서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얻어지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대·중소 기업 구성비를 위에서 구한 한중 교역의 산업별 효과 추정치와 접속하여 한중 교역이 기업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자료확보가 가능한 제조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 대·중소 기업 간 성장격차에 대한 한중 교역 효과의 기여율은 약 28% 정도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한중 교역의 수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 부문이나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산업과 서비스 부문을 포괄한다면 기업 간 양극화에의 기여효과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 2-8〉 한중 교역과 대·중소기업간 성장 격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06
실제성장률	대기업(A)	1.10	9.31	0.83	20.13	10.17	9.46	9.28
	중소기업(B)	-0.01	-0.22	5.93	-0.21	22.91	7.07	7.15
	격차(A-B)	1.11	9.54	-5.10	20.33	-12.74	2.39	2.13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대기업(C)	0.66	1.68	3.29	2.78	2.64	0.41	1.91
	중소기업(D)	0.26	0.50	3.38	0.79	4.18	-1.26	1.31
	격차(C-D)	0.40	1.18	-0.09	1.99	-1.54	1.67	0.60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35.77	12.39	1.67	9.78	12.10	70.01	28.33

6.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먼저 향후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중 교역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한 한중 교역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양국 간 교역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역규모나 특히 무역흑자의 증가세는 최근 수년 간 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중국의 수출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 간의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군별 수출입 특화의 차이도 과거에 비해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어느 편이나 한중 교역의 산업양극화 효과가 전체적으로 과거 수년간에 비해 앞으로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교역에 의한 산업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대외경쟁력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로는 양극화에 대응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 내지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이다. 소위 조정지원(adjustment assistance)정책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나 기타 법적 측면 등에서의 지원을 통해 특정 부문의 사업전환이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역의 결과로 불이익을 보는 산업 부문이 경제 전체에 대해 외부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어, 해당 산업의 교역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한편 양극화와 관련된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산업 간 양극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 간 격차 확대 그 자체라기보다는 산업 양극화가 예컨대 기업 간 양극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는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책 대응은 첫째로는 산업 간 양극화 그 자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산업 양극화가 기업 혹은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는 경로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위에서 이미 논의한 산업간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 내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맺음말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양극화의 문제를 산업 간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한중 교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 양극화의 현상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자원이 이동해야 업종 간 격차가 감소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

청되고 신속한 자원이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저렴한 생산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활발한 혁신활동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는 새로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유리한 기업환경이 요구되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제개발 시기에 하도급거래 확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불균등한 대·중소기업 관계가 지금까지 양자 간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여건 하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장기적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향상으로 호응하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력의 격차에 힘입은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납품단가 결정 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며, 불공정 거래관행도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고착화 혹은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기여도가 낮다는 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대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투자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저성장·저고용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문별·계층별 이동성 또한 약화되어 왔다.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집약되는 노동시장·고용 위기는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상호작용하여 초래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서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기술특성 변화 등 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이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분배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각 연구마다 분석대상 영역과 방법론이 상이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의 성격, 산업부문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고용의 질 변화, 소득불평등에서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학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들 가운데 경제·산업부문의 구조 변화라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 유연화가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이행의 내용 및 질적 수준에서 근로자집단 및 산업 간에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의 불균등구조를 고용구조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서비스산업의 확대 경향과 고용구조 및 소득 불평등 변화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5절에서는 미취업↔취업의 노동시장이행이 산업별 및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근로자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미취업↔취업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제2절 산업구조 변동과 고용의 불균등구조

1. 문제 제기

노동체제의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그 문제 현상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실태분석의 연구들이 적잖게 축적되어 왔으나 주로 노동시장 전반의 총량지표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생산과정-직무숙련-고용관계-노동시장의 관행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양극화의 산업적 양태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론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양극화의 효과적인 정책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총량적 문제 진단을 넘어서 산업간 고용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산업수준의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나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탈산업화-지식/정보경제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 변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별 고용구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태분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법 찾기를 위한 정책처방을 마련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산업 수준에서 발현되는 노동양극화의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산업간 변화 추이와 최근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노동시장 분절구조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지표를 종합한 “고용 질” 지수(Employment Quality Index, EQI)를 개발하여 산업별 편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산업별 고용 질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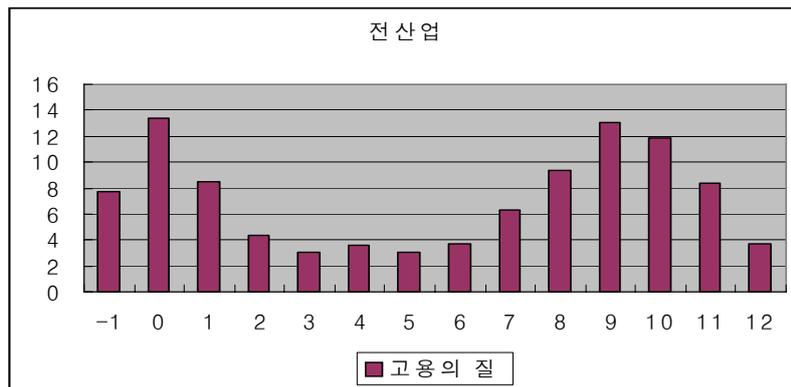
산업간 고용 질의 차이를 측정·검정하기 위해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의 관련 조사항목 13개를 선정하여 총합하는 고용 질 지수(EQI)를 산출하여 산업간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EQI의 산출에 고려되는 세부 구성항목은 <표 3-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으며, 전체 13개 항목 중에서 LoWER 저임금집단에 대해서만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는 한편, 남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여 합계한 점수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EQI는 최고 12점~최저 -1점으로 분포한다.

〈표 3-1〉 고용 질의 측정 요소

범주	세부 구성요소
법정근로기준(4개)	퇴직금(57.5%), 시간외수당(43.3%), 유급휴가(49.8%), 근로계약 작성(42.8%)
사회보험가입(3개)	국민연금(63.2%), 건강보험(64.4%), 고용보험(55.3%)
고용조건(4개)	정규직(64.1%), 시간당 LoWER 저임금(-; 27.4%), 5년 이상 근속기간(28.7%), 주5일제 시행(39.8%)
인적자원관리(2개)	상여금(55.9%), 교육훈련(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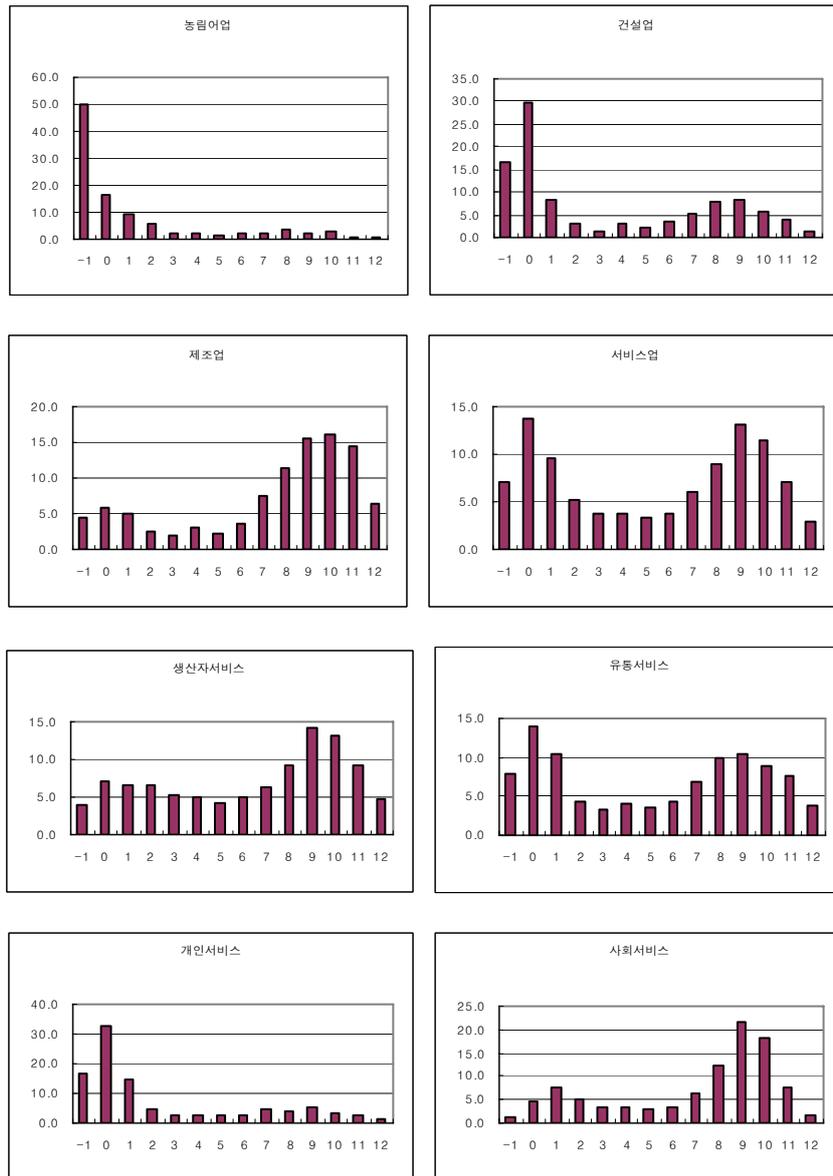
[그림 3-1]은 전체 산업의 고용 질 지수(EQI)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바, “쌍봉형(Bi-modal shape)”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림 3-2]에서는 산업별 EQI 분포를 보여주는데, 제조업·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업은 우편향 쌍봉형을 보여주는 반면, 서비스업 전체와 유통서비스는 좌편향 쌍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업은 대체로 좌단 밀집의 ‘L자형’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1] 전산업의 고용 질 분포



고용의 질의 산업간 편차를 검정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의 사후 변량검정(Post Hoc test)을 위한 Duncan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표 3-2>에서는 산업부문들의 고용 질 지수에 대한 1:1 비교를 통해 그 위계 구조를 판별해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 질의 산업간 편차($\alpha < .05$)에 있어 6개 하위집단(subsets)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상위의 고용 질 지수를 가진 산업부문으로는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국제·외국기관이며, 차상위 집단으로는 통신업, 공공행정서비스, 광업, 보건복지, 제조업, 금융보험,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서비스가 평균 -0.133의 점수를 드러내 최하위 고용 질을 가지는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업, 숙박음식, 어업의 경우 1점대의 평균값을 보여주어 차하위의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3-2] 산업별 고용의 질 분포



〈표 3-2〉 고용 질의 변량분석(ANOVA) Post Hoc(Duncan) 검정 결과

산업분류	빈도(천명)	Subset for alpha = .05					
가사서비스	159	-0.133					
농림업	132		1.050				
숙박음식	1174		1.248				
어업	17		1.554				
건설업	1394			3.329			
기타공공개인서비스	668			4.165			
부동산임대	297			4.192			
도소매	1942			4.262			
오락문화	310			4.399			
보건복지서비스	1333				6.248		
사업서비스	1738				6.347		
운수	682				7.123	7.123	
금융보험	747				7.179	7.179	
제조업	3458				7.373	7.373	
보건복지서비스	680				7.423	7.423	
광업	17					7.733	
공공행정서비스	799					7.919	
통신	230					7.941	
국제기관	18						9.472
전기가스수도	77						10.067
Sig.		1.000	0.401	0.090	0.067	0.218	0.290

이상의 변량분석(ANOVA)에서는 여타의 인적·사업장 특성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산업간 고용 질 지수의 차이를 검정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통제된 비교를 실시하였다. 노동자 인적 속성과 사업장 특성을 통제한 각 분석모형에서 분석 초점이 되고 있는 고용 질의 산업간 편차 유의도를 검정하기 위해 광공업을 기준범주로 삼아 비교한 결과, 전기·가스·수도업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범주가 유의하게 음(-) 회귀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고용조건들을 총합한 고용 질 지수(EQI)에 대한 산업간 비교를 통해 제조업(광

업 포함)이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모든 부문에 비해서도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금융보험업>운수통신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기타공공/개인가사서비스>농림어업>숙박음식업>건설업의 순으로 그 상대적 크기가 서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상기한 변량분석의 사후검정 결과와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양극화 추이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면에는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과 불균등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 질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실상을 산업별로 분해하면 각 산업부문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양극화구조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고용 질의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부문과 좋은 고용 질의 제조업-사회서비스-생산자서비스부문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고착화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이러한 산업간 불균등구조가 내재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에 의거, 노동시장의 총량적 정책처방을 지양하고 산업별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산업부문을 유지·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나쁜 일자리의 산업부문에서 고용조건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요망된다. 우선, 산업별 고용구조와 고용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규모 및 비중이 그 생산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장표, 2007). 따라서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을 수 있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공동화(de-industrialization) 및 해외생산기지 이전을 제어하고 생산거점 투자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협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행 장시간 생산체제에서 탈피하여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적극 유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용구조는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양극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부부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상 탈산업화, 즉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를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지난 1990년대 이래 서비스산업 내부에서 특히 유통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생산자서비스의 고임금부문과 개인서비스의 저임금부문에서 동시에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노동양극화에 일정하게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고임금·고부가가치의 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부문은 해당 서비스의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부문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과 투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망되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 증대에 못지않게 양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고려(물론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특히 교육·보건복지·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적인 저임금·저부가가치의 개인서비스·유통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사업부문의 규모 확대와 경영방식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 탈

법·편법 노무관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법정고용조건 강제를 위한 정책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저부가가치부문(유통·개인서비스)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실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고임금부문으로의 상향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제3절 산업별 임금 불평등도와 임금불평등 분해

1. 문제 제기

오늘날 사회양극화는 분배구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사회·정치적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9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 2000년대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 단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산업별 임금 불평등의 실태와 외환위기 전후의 산업별 임금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불평등 정도와 산업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와 지니계수 및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중심으로 산업별 임금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임금 불평등을 산업간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하였다.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임금불평등의 요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용자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산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과 관련된 임금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을 7개 산업으로 구분한다. 7개 산업분류는 제1차 산업(농림어업 및 광업)과 제2차 산업(제조업), 제3차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전기·가스, 금융,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업(도소매, 운수, 통신), 개인서비스업(음식, 숙박, 기타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오락·스포츠, 국제·외국기관 근무) 및 건설업으로 구성된다.

2. 산업별 임금불평등 분해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이다. 2005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2007년도 자료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산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산업 3분류에서 제1차 산업 월평균임금이 79.2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제3차 산업 월평균임금이 106.0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7가지로 구분하여 산업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191.78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개인서비스 종사자가 농림어업·광업 다음으로 낮은 100.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제3차 산업 내에서 대단히 큰 임금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에 따라서 종사하는 피고용자들의 인적 속성은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산업간 성별 분포도 대단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업과 제1차 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각각 67.05%와 62.65%에 달하였다. 반면, 건설업의 여성 비율은 9.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높은 이들 산업에서 대체로 임금이 낮았지만, 임금이 가장 높은

사회서비스업에서도 여성 비율이 55.15%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연령분포도 대단히 큰 편차를 보였다. 제1차 산업의 평균 연령이 56.82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설업으로 42세였다. 반면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은 산업부문은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각각 37.07세와 37.67세였다.

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도 극단적 차이를 보여준다. 농림어업의 경우 피고용자의 66.0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졸업자 비율은 5.05%에 불과하였으며, 대졸자 비율이 3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자 비율도 9.16%에 달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거의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대졸자이고, 11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대학원 졸업자임을 알 수 있다. 제2차 산업과 유통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학력 분포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평균임금 수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학력분포도 매우 유사하여 산업 속성은 다르지만, 종사자의 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전체 평균은 4.87년이지만, 농림어업 및 광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에서 평균 근속연수는 2년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제조업,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가장 임금이 높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7.87년으로 근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직업분포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숙련 노동자 비율은 제1차 산업에서 54.46%로 가장 높았고, 사회서비스업에서 6.82%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관리직·전문직 비율은 농업에서 0.96%로 가장 낮았고, 사회서비스업에서 34.31%로 가장 높았다. 사회서비스업은 관리직·전문직과 기술직·준전문직의 비율이 52.27%에 달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숙련·반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53.12%와 50.67%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미숙련 노동자 비율까지 합치면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노동자의 비율은 각각 62.17%와 74.67%에 달하였다. 이처럼 산업에 따라서 직업 분포가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된 엔트로피(GE)와 로그임금분산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임금불평등 분해방법에 기초하여 불평등을 집단별 임금불평등 분해와 회귀분석에 기초한 필즈(Gary Fields)의 임금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지수 분석을 통해서 월임금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피고용자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E0, E1, E2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근로자 임금 불평등도 또한 0.3482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높은 불평등 지수와 관련하여 3가지 점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차이 때문이다. 이전의 임금불평등 연구들이 10인 이상의 민간부문 상용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구조기본조사」를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전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 피고용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불평등지수는 이전 연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시간적으로 임금불평등 지수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전체 피고용자 임금불평등 엔트로피지수를 포함한 모든 불평등지수가 커졌다. E0, E1, E2, CV와 Gini 계수 모든 불평등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산업내 불평등을 살펴보면, 제1차 산업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한 반면,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의 임

금불평등 증가도 모든 불평등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제3차 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에서 불평등이 증가하였고, 개인서비스는 불평등지수에 따라 증감이 동시에 나타났다.

<표 3-3>은 전체 피고용자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산업내 불평등과 산업간 불평등으로 분해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점은 2005년 전체 불평등 지수에서 산업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E0, E1, E2 3가지 엔트로피 지수에서 산업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타일지수(E1)를 살펴보면, 지수 값은 0.0028로 전체 0.1990의 1.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8.6%가 산업내 임금불평등에 따른 임금불평등이었다. 이것은 피고용자들의 임금불평등 요인으로 산업간 임금불평등이 무시할 만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고용자 임금불평등 요인이 주로 산업내의 불평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2007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간 불평등 지수가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대단히 작은 증가로 그치고 있다.

전체 불평등에서 산업내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제3차 산업내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3%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전체 불평등에서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5~76%에 달하고 있다. 제3차 산업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임금불평등에 더 큰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7년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80%를 상회하여 2년 사이에 4% 정도 증가하였다.

제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3차 산업을 4가지 서비스업으로 나눠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3차 산업에서 건설업은 분리하여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최종분석에서는 7개 산업분류

가 사용되었고,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분해 결과는 <표 3-3>의 패널 B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3차 산업을 4개의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결과, 제조업, 유통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세 가지 산업으로 밝혀졌다. 이들 산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산업 가운데서는 사회서비스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을 나타냈다. 다시 타일지수(E1)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0.0492로 전체의 임금불평등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산업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사회서비스업 임금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낮았다. 그 다음이 사업 서비스로 17.5%인 0.0348이었다.

<표 3-3> 산업별 불평등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 결과(2005년)

	산업	E ₀	E ₁	E ₂	사례수
2005년	전체	0.2173	0.1990	0.2260	26,083
	산업간 불평등	0.0036	0.0028	0.0026	3
	산업내 불평등				
	A. 산업 3분류				
	1차 산업	0.0057	0.0027	0.0017	415
	2차 산업	0.0419	0.0419	0.0514	6,145
	3차 산업	0.1661	0.1516	0.1703	19,523
	B. 산업 7분류				
	농림어업	0.0057	0.0027	0.0017	415
	제조업	0.0419	0.0419	0.0514	6,145
건설업	0.0126	0.0109	0.0113	2,307	
사업서비스	0.0325	0.0348	0.0455	3,985	
유통서비스	0.0344	0.0275	0.0276	4,605	
개인서비스	0.0223	0.0134	0.0098	3,275	
사회서비스	0.0477	0.0492	0.0414	5,351	
2007년	전체	0.2263	0.2089	0.2412	25,975
	산업간 불평등	0.0042	0.0034	0.0036	3
	산업내 불평등				
	A. 산업 3분류				
	1차 산업	0.0055	0.0028	0.0020	421
	2차 산업	0.0427	0.0448	0.0590	5,693
	3차 산업	0.1739	0.1574	0.1766	19,861
	B. 산업 7분류				
	농림어업	0.0055	0.0028	0.0020	421
	제조업	0.0427	0.0448	0.4806	5,693
건설업	0.0134	0.0121	0.0127	2,349	
사업서비스	0.0361	0.0381	0.0483	4,326	
유통서비스	0.0352	0.0291	0.0303	4,470	
개인서비스	0.0218	0.0134	0.0104	3,307	
사회서비스	0.0524	0.0513	0.0627	5,409	

주: 반올림을 한 관계로 산업내 불평등과 산업간 불평등 합이 전체 불평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3-4>는 전체 임금의 분산에 각 요인들이 기여하였는가를 필즈(Gary Fields, 2003)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005년과 2007년 공통적으로 임금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근속년수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로 밝혀졌다. 두 가지 요인이 전체 불평등의 거의 절반을 설명하고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피고용자 임금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으로서 전체 임금불평등의 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4%로 나타났다.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노동시간이 불평등에 미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전체 불평등의 1/4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대가 근로자 임금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표 3-4〉 R2 분해를 통한 변수들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 분석

	2005		2007	
	연령	.049	7.78%	.106
연령제곱	.038	6.07%	.000	0.03%
젠더	.086	13.69%	.085	13.23%
교육연수	.124	19.73%	.116	17.95%
근속년수	.157	25.13%	.153	23.62%
노동시간	.012	1.91%	.014	2.13%
정규직/비정규직	.153	24.38%	.162	25.02%
노조가입여부	.008	1.31%	.010	1.63%
전체 R ²	.6262	100.00%	.6458	100.00%

주: 여기에서는 학력 변수를 범주형 변수 대신에 연속형 변수인 교육연수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R2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변화는 연령과 관련된 요인들(연령과 연령제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각 요소들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연령제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연령 자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령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3.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임금 불평등을 산업간 임금불평등과 산업 내 임금불평등으로 분해하여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분석하고, 근로임금 불평등의 요인별로 분해하여 산업별 임금격차의 핵심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업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대단히 적다. 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포괄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인적 자본의 효과와 성차별적 임금체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산업별 임금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회귀분석을 통한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임금불평등의 산업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점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산업에 따라 임금수준, 성별 분포, 학력 분포, 평균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노조조직률, 직업구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1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사회서비스부문은 임금수준, 성별분포, 학력수준, 직업구성 등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산업 내의 인적 자본 분포와 산업의 평균임금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일반화된 엔트로피(GE), 분산계수(CV)와 지니계수(Gini)와 같은 임금불평등 지수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 피고용자들의 임금불평등도는 이전의 유사한 연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핵심적 이유는 자료의 차이에

근거한다. 이전의 연구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10인 미만이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제외시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나타난 근로자 임금불평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적으로 임금불평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불과 2년 시차를 두고 있지만, 두 시기의 수집된 자료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 점은 근로자 전체의 임금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제1차 산업에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서 불평등이 증가하여 산업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차 산업내의 불평등 심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또한 계속해서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제3차 산업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곧바로 전체 피고용자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자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임금불평등 분해 결과, 산업간 불평등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임금불평등은 산업내 불평등의 산물로 밝혀졌다. 산업내 임금불평등을 산업별로 분해한 결과, 제2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3%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의 비중은 75~7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차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산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7개 산업 가운데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 불평등은 산

업분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산업내 임금불평등도 산업을 세분화시켜 분류하는 경우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산업범주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섯째,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점은 근로자 소득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며, 산업의 영향력은 전체 로그임금 분산의 8%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적 속성과 노동시장조건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각각 전체 분산의 55~56%와 37~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피고용자의 월평균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큰 미치는 요인들은 근속년수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기초한 임금불평등 분해분석은 근속년수와 정규직 여부가 전체 불평등의 절반 정도를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교육과 성별의 영향이 컸다. 반면, 노동시간과 노조여부에 따른 임금불평등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임금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은 경제위기 이후 보다 크게 대두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산업 내의 임금결정에 미치는 변수들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의 개인서비스업에서 교육수준은 임금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수준은 사업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크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특수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노동력의 구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또한 노동력에 대한 상이한 보상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산업으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적 자본에 대한 보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와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정책적

합의를 지닌다. 첫째, 산업간 불평등보다 산업내 불평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내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차 산업에서 산업내 불평등이 크지만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근속년수와 고용형태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근로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근속년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이야말로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셋째, 전체 불평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내 불평등 가운데서 성차별에 따른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불평등을 낳고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이루어지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보상은 남성에서 높게 이루어져 성차별적인 보상체계의 속성을 보여준다. 연령이나 성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요소들이기 때문에 연령과 성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 등 성차별이 심한 산업에서 성차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4절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1. 문제 제기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경향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보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서비스산업 생산액은 2005년에 GDP의 70%를 넘었고, 서비스산업에 고용된 인력도 이미 1990년대에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World Bank, 2007). 또한 한국사회에서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로 약화되는 반면, 서비스산업 비중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61.6%였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2006년에는 66.4%로 늘어났다.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기업간 관계,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그리고 소득불평등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고용이 지배적이며, 금융·통신·교육·문화산업 등 최근 부각되는 서비스산업에서도 노동유연화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외부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이성균, 2004).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인사관리방식이나 노사갈등에서도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로 표현되는 탈산업화 경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확대와 소득불평등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고용구조상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가? 서비스산업 중 저소득 취업자가

많은 영세사업체의 고용이 증가한 때문인가, 혹은 서비스산업의 노동유연화로 인하여 종사상 지위별 불평등이 증가한 결과인가? 본 연구는 산업별 소득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서비스산업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 저임금이 일반화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소매·음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인적 자본으로 인하여 저임금 취업자를 양산한다. 그러나 후기산업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시각을 반대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전자·소프트웨어·유전공학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에 주목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현재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학자들에게도 공존한다. 서구(특히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일부 학자들은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를 경험하였는데, 일부 학자들과 정책전문가집단은 “임금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전통적으로 저임금 직종이 집중된 서비스산업이 확대됨으로써 취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소득불평등도 증가한다”는 나쁜 일자리(bad job)의 저임금 효과를 주장하였다. 반면 후기산업화 이론가들은 서비스산업 종사자 가운데 전문기술직 등의 고소득화를 강조한다. 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는 지식경제활동 종사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이러한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에 금융보험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8% 높다”는 점을 근거로 후기산업화 분야의 일자리는 더 이상 영세한 저임금 부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후기산업화

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취업자를 증가시킨다면,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격차이다. 전통적 시각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임시직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고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유연적 고용형태(flexible employment)가 확산됨에 따라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는 고용주들은 단기간에 노동력수요변동이 큰 직무에 대해서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수요변동 가능성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또한 서비스업 가운데 자동화를 도입하는 대규모사업체에서 더 높아 비정규직 고용이 현대의 서비스산업에서도 지배적이다. 또한 정보화와 기술혁신은 기존의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일부 사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처리 등의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업체에 외부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불안정 취업자도 증가한다. 이러한 유연적 고용형태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비스산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취업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논의는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이며, 서비스산업 자체도 내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서비스산업구조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형태상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주로 영세한 개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 구성된다면, 비정규직 및 저임금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득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가운데 생산자서비

스산업부문이나 대자본에 기초한 서비스 활동의 비중이 높다면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두 가지 산업부문으로, 혹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분화되면, 중간소득계층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구조도 양극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서비스산업의 내부구성, 서비스산업의 고용형태별 규모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3.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와 소득불평등 분석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개인·유통서비스부문 영세사업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생산자·사회서비스부문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및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산업부문,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소득격차를 낳을 것이다.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산업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 증가율이 상이하다.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부문과 제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고, 개인서비스부문과 사회서비스부문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제조업 취업자의 2005년도 소득은 1999년에 비하여 54.9%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서비스부문에서는 이 보다 약간 높은 5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인서비스부문에서는 동 기간에 32% 증가한데 그쳤다. 1998년 당시에 생산자서비스부문과 제조업의 소득수준이 후자의 산업부문 보다 높았는데, 이후 7년간 소득증가율이 달라져 4개 산업부문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비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임금근로자만을 비교해도 그대로 나타난다.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임금근로자들의 2005년도 임금은 제조업의 경우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소득이 가장 낮은

개인서비스부문 임금근로자보다 1.7배 정도 높다.

한편 동일 산업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명확히 나타난다. 월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에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2배가 넘으며, 개인서비스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1.6배에 이른다. 이러한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유통서비스부문이나 사회서비스부문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근로자 개인간 소득불평등은 산업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타일(Theil) 지수로 측정된 불평등지수의 2단계 분해를 시도한다. 1단계는 전체 불평등을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며, 2단계는 산업을 기업규모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산업내 불평등을 이러한 하위집단간 불평등과 하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분석 결과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높다. 고용주를 제외한 임금소득자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기록하였다. 한편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산업간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면,¹⁾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산업간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간 소득불평등의 비중은 전체 소득불평등의 5% 이하를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설명력도 시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산업간 소득불평등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는 경향성이 보이지만 그 비중이 낮아 전체 소득불평등의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분석을 서비

1) 산업은 1차 산업(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만으로 제한한 분석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5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업으로 한정하여 4개 서비스부문(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간의 평균 소득격차를 비교하면, 4개 부문간에 소득격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예를 들어서, 4개 서비스부문간 소득불평등이 총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1998년에 1.5%이었으나, 2005년에는 2.7%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단순히 서비스업과 다른 산업, 혹은 서비스업의 4개 부문간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이후 총 소득불평등 증가가 대부분 산업내(혹은 4개 서비스부문내) 불평등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각 산업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위집단간 소득격차를 분해하면 좀 더 명확해진다. 첫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소득 불평등의 20% 이상은 기업규모간 불평등으로 설명된다. 총 소득불평등을 10개 규모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기업규모간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기업규모간 격차의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였다(<표 3-5>). 제조업에서는 총 소득불평등 가운데 기업규모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10%에서 2005년 26%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둘째, 2005년의 총소득 불평등 가운데 16-20%는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에 의한 소득격차로 설명된다(<표 3-6>).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고용형태간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용형태별 소득격차의 설명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약간 더 크다. 제조업에서는 고용형태간 불평등이 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6%(1998년)에서 16%(2005년)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4%에서 19%로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노동유연화 확대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표 3-5〉 각 산업별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제조업			
	총불평등	기업규모간 불평등	기업규모내 불평등	기업규모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26	0.013	0.113	10.3%
1999	0.124	0.018	0.106	14.5%
2000	0.128	0.019	0.109	14.7%
2001	0.139	0.020	0.119	14.1%
2002	0.130	0.021	0.110	15.8%
2003	0.158	0.027	0.130	17.2%
2004	0.144	0.034	0.110	23.5%
2005	0.152	0.040	0.112	26.2%
	서비스업			
	총불평등	기업규모 간 불평등	기업규모 내 불평등	기업규모 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54	0.024	0.130	15.4%
1999	0.158	0.026	0.132	16.6%
2000	0.155	0.023	0.132	14.7%
2001	0.170	0.026	0.143	15.4%
2002	0.165	0.027	0.137	16.5%
2003	0.180	0.030	0.150	16.6%
2004	0.187	0.040	0.147	21.2%
2005	0.179	0.035	0.144	19.5%

결국 1998~2005년의 소득불평등은 산업간 차이보다는 산업내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차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기업규모간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산업화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영세사업체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에 소득불평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6〉 각 산업별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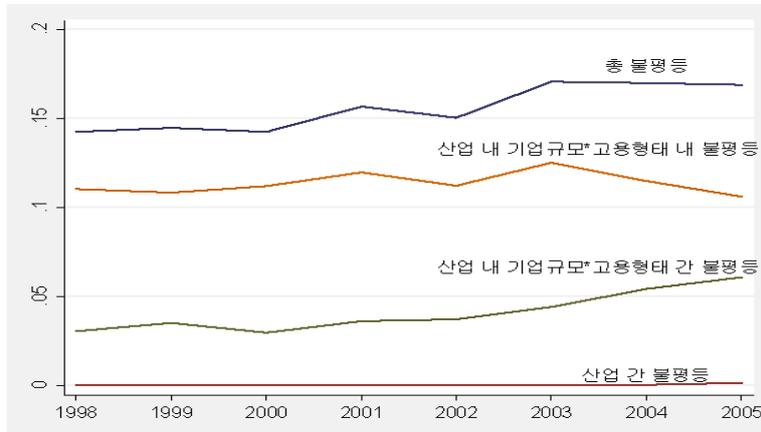
	제조업			
	총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고용형태내 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26	0.007	0.119	5.8%
1999	0.124	0.013	0.111	10.5%
2000	0.128	0.008	0.120	6.4%
2001	0.139	0.009	0.130	6.6%
2002	0.130	0.012	0.119	9.1%
2003	0.158	0.017	0.141	10.7%
2004	0.144	0.015	0.129	10.5%
2005	0.152	0.025	0.127	16.2%
	서비스업			
	총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고용형태내 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54	0.021	0.133	13.8%
1999	0.158	0.024	0.134	15.4%
2000	0.155	0.018	0.137	11.6%
2001	0.170	0.022	0.147	13.2%
2002	0.165	0.021	0.144	12.5%
2003	0.180	0.026	0.153	14.6%
2004	0.187	0.030	0.157	16.1%
2005	0.179	0.034	0.145	18.9%

실제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교차시킨 20개의 하위집단으로 각 산업별 임금근로자들을 구분하고 산업내 총 소득불평등을 이들 하위집단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면, 두 가지 변수의 불평등효과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그림 3-3]과 [그림 3-4]). 총소득불평등은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내 불평등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도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6개 산업간(농림어업/제조업/개인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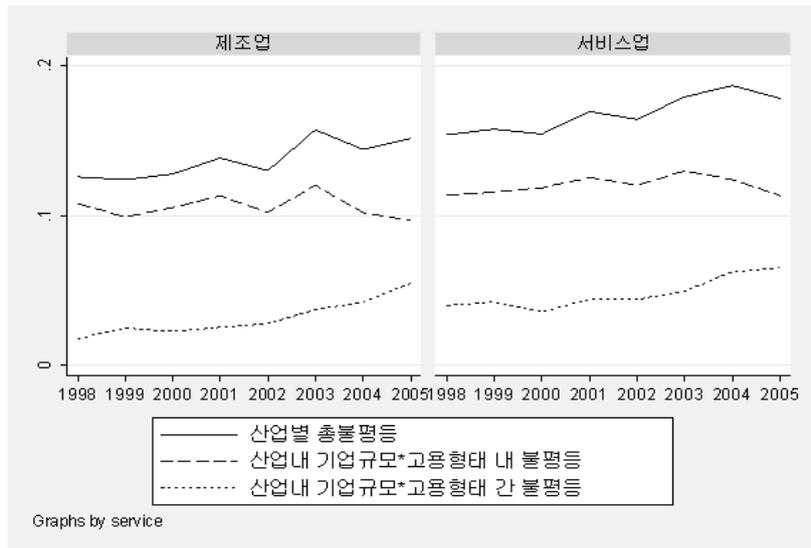
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불평등이 총불평등의 5%도 설명하지 못하는 데 반해,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30% 이상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요인의 설명력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부의 총 소득불평등 가운데 20개 하위집단간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4%에서 2005년 36%로, 서비스업에서는 26%(1998년)에서 35%(2005년)로 증가하였다.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내 불평등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 총 소득불평등의 2단계 분해 결과의 추이



[그림 3-4] 각 산업별 소득불평등의 하위집단 분해 결과의 추이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전통성과 영세성이 여전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며, 생산자서비스부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영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및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체는 여전히 많은 파트타임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금융, 의료, 정보관련 산업 사업체들도 노동유연화에 기초한 인력채용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업 내부의 산업부문간 소득격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 내부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질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부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증가함으로써, 산업내 소득이질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 증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탈산업화 경향 자체보다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산업의 영세성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표현되는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법률·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보건·교육·복지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정부의 일자리 확대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취업자로 채워진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당사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절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 논문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제5절 취업↔미취업 이행에서의 격차: 산업간·근로자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유연화전략 강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어떤 노동력 상태(예: 취업)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예: 실업)로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인적 특성, 직업경험, 상황을 가지는 근로자 사이에 노동시장이행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서 일정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태변화와 관련하여 실업탈출 가능성, 그리고 취업이탈 가능성이 산업·기업 특성이나 근로자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자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지, 특히 어떤 근로자집단이 노동시장이행에서 초래되는 위험성에 취약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취업↔취업 이행에서 집단간 또는 산업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상향이동에 실패하여 저임금과 실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하거나 활발한 노동이동을 통해 상향이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취업↔취업 이행과정, 즉 '취업→실업→직장탐색→취업→실업...'이라는 노동시장이행과정에서 근로자집단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소득불평등 현상을 보다 종합적·동태적으로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경제학자 Schmid(1998)에 따르면,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은 현재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뚜렷한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로생애에 걸쳐 직장↔직장, 고용↔실업, 고용↔가사활동, 고용↔질병·사고에 따른 근로능력상실 등 다양한 유형의 이행을 경험한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개인적 욕구를 중시하는 생애설계 경향의 확산 등에 따라 이러한 이행행위들이 활발해지고 평생직장 개념은 점차 과거의 특성으로 되고 있다.

노동시장이행 및 이를 통한 노동유연성의 증대는 근로경력을 개인적 생활과 일치시키려는 근로자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이행은 근로자에게 일종의 위험(risks)을 초래한다. 점증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은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이며, 모든 개인들은 잠재적으로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Ullrich Beck, 1992). 즉, 일시적 근로경력 단절이 의도와는 다르게 영속적(permanent)인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개인들은 근로생활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행숙련(transitional skills)에서도 차이가 난다. 노동시장 내 특정 근로자집단은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자원보유 수준이 취약하고 이행숙련 또한 낮기 때문에(Bourdier, 1986), 보다 심각한 노동시장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경력에서 하향이동의 함정, 즉 배제적 이행(exclusionary transitions)으로 귀결되어 결국 반복적 실업 또는 장기실업과 빈곤으로 빠지는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행노동시장의 모범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 국가에서조차 과연 이행노동시장 출현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규명은 중요한 논쟁 및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일자리 이행경로 및 미취업탈출확률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이 경험하여 왔던 일련의 일자리들이 지속된 기간(job spell), 일자리 사이의 기간, 즉 미취업기간(non-job spell)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²⁾ 어떤 근로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n 번의 일자리를 경험하였다고 하면, 일자리 이행경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jobsp1 \Rightarrow njobsp1 \Rightarrow jobsp2 \Rightarrow jobsp2 \Rightarrow \dots \Rightarrow njobspn-1 \Rightarrow njobspn$
 여기서 $jobsp$ ($i=1,2,\dots,n$)는 i 번째 일자리, $njobsp$ i 는 $jobsp$ i 와 $jobsp$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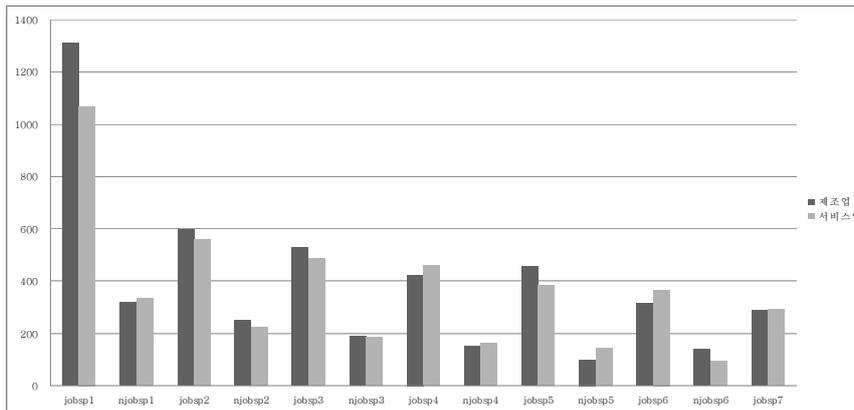
2)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에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상태를 포함하여 미취업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사이에 존재하는 미취업기간을 말한다. 여기서는 분석기간(이직시기 기준으로 1997~2006년) 동안 7번까지의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n=7$)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³⁾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평균적 이행 경로와 미취업탈출확률에서 근로자집단 및 산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저임금·비저임금, 정규직·비정규직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이행과정을 비교하면([그림 3-5]), 산업에 관계없이 일자리 수가 증가할수록 일자리기간과 미취업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자리기간을 보면, 4번째 일자리부터는 뚜렷한 경향이 없지만 3번째 일자리까지는 대체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길게 나타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미취업기간을 비교하면, 일자리 수에 따라 변하며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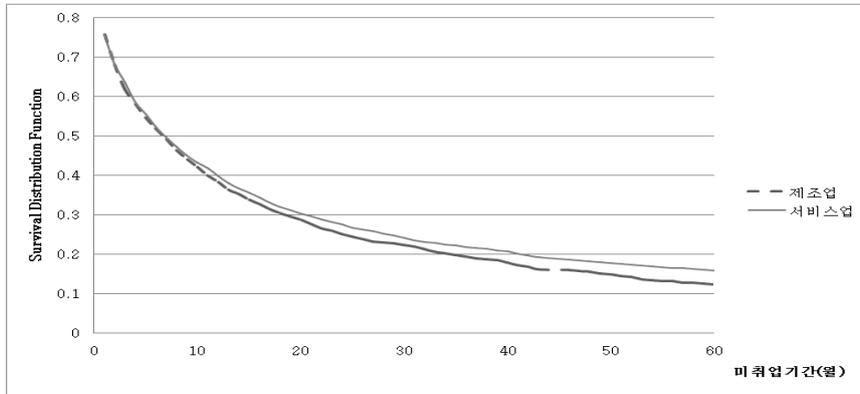
[그림 3-5]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제조업과 서비스업



3) 실제로 전체 표본의 99% 이상이 7번 이하의 일자리를 경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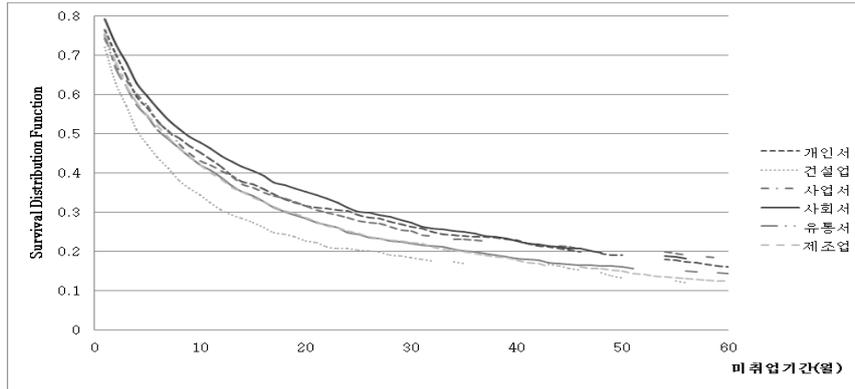
두 산업부문의 미취업 생존곡선을 비교하면([그림 3-6]), 거의 모든 미취업 기간에서 서비스업의 생존곡선이 제조업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는 어떤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처음 7~8개월까지는 서비스업의 생존곡선이 제조업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나 이후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산업부문의 생존곡선의 거리가 벌어진다. 이는 미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제조업에 비해 더욱 낮아짐을 의미한다. 미취업 탈출 확률 및 생존곡선을 6개 산업으로 세분하여 비교하면([그림 3-7]), 취업기간에 따라 생존함수의 위치가 바뀌지만 대체로 건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순으로 그 뒤를 이으며,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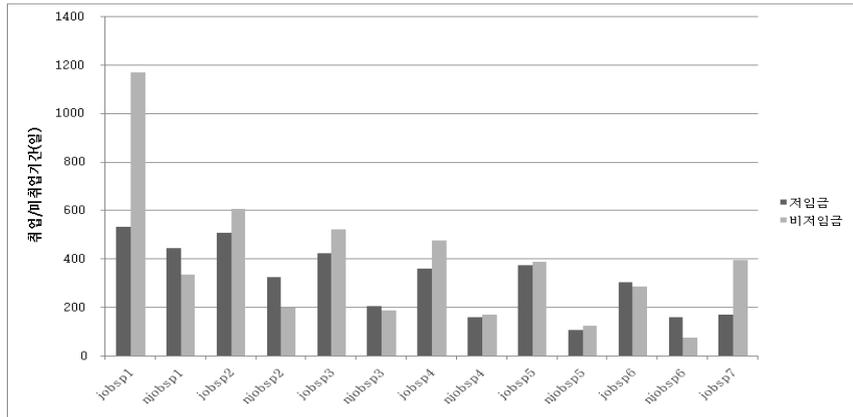
[그림 3-7]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6개 산업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를 비교하면([그림 3-8]), 저임금 및 비저임금 근로자 공히 일자리·미취업기간 횡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기간과 미취업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각의 일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비저임금 근로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 3회까지의 미취업기간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긴 미취업기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저임금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비저임금 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직업탐색의 어려움이 크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취업기간이 길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3-8] 일자리이행과정 비교: 저임금 vs 비저임금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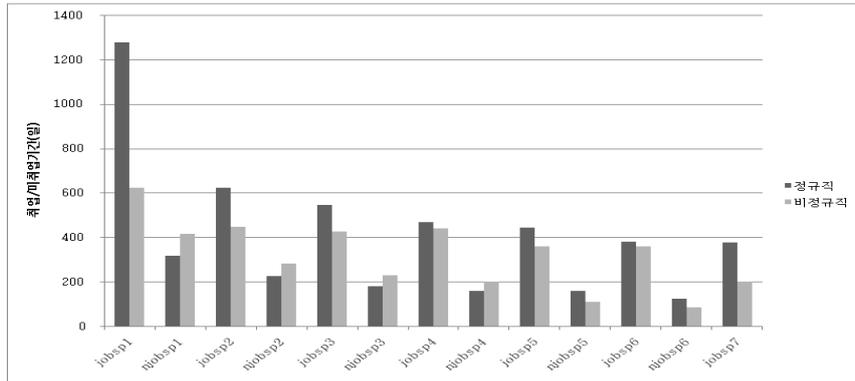


주: 저임금이란 1번째 일자리 임금이 중위(median)임금의 60%에 못 미치지 경우임.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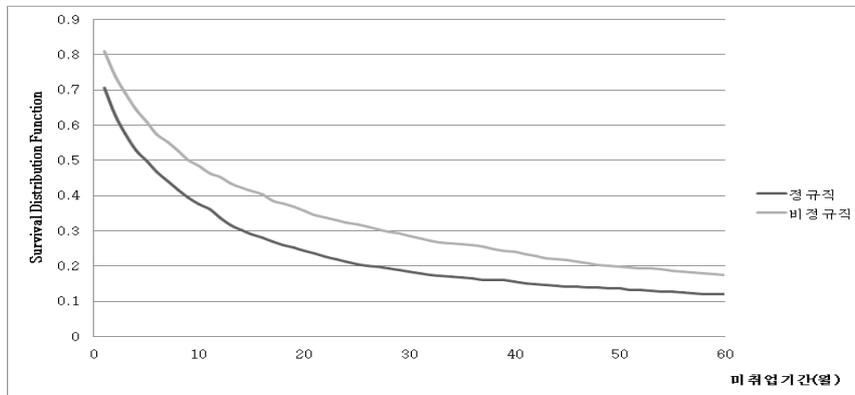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행경로를 비교하면([그림 3-9]),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은 일자리 횟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대체로 일자리기간은 짧고 미취업기간은 길게 나타나 이행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취업 직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미취업 탈출확률을 비교하면([그림 3-10]), 비정규직 경험 근로자의 생존곡선은 정규직 경험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위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 경험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경험 근로자들은 실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미취업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위 '비정규직 함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3-9]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1번째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그림 3-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비정규직 경험 여부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3.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Weibull 모형을 이용하여 미취업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근로자의 이행행위와 미취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된 가운데 각 요인들의 순효과를 제시해 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미취업기간(개월)이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성, 학력, 정규직 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비자발적 이직 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산업, 월임금 등을 포함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7>), 먼저 연령의 경우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어 연령이 많을수록 미취업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제곱의 계수 값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연령에 대한 미취업기간 곡선이 U자형 형태를 가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청년층은 중간이며 고령층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기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있었던 근로자는 비정규직 경험자보다 미취업기간이 적으며,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한 미취업기간이 낮아지는데, 이는 실직 후에 고용보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업탈출이 보다 쉬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의 미취업기간이 타 직종보다 길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은 근로자일수록 미취업기간이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산업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생존곡선 분석결과와는 다르다. 이러한 상충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변수	전체산업 종속변수:ln미취업기간, n=6083			제조업(임금근로자) 종속변수:ln미취업기간, n=1439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상수항	3.7843	0.1649	<.0001	3.6803	0.3609	<.0001
연령	-0.0675	0.009	<.0001	-0.0489	0.02	0.0146
연령제곱	0.0008	0.0001	<.0001	0.0005	0.0003	0.0517
남자=1	-0.2194	0.0344	<.0001	-0.1308	0.0741	0.0774
전문대이상=1	0.0534	0.0421	0.2044	0.1281	0.1021	0.2097
정규직=1	-0.1729	0.0418	<.0001	-0.182	0.069	0.0083
고용보험=1	-0.0861	0.0382	0.0244	-0.0552	0.0677	0.4149
비자발 이직=1	0.1621	0.0361	<.0001	0.1101	0.0719	0.1253
관리·전문직=1	-0.0774	0.0449	0.0848	-0.1792	0.1209	0.1381
생산직=1	-0.0959	0.0419	0.0223	-0.0864	0.0996	0.3856
제조업=1	0.16	0.0398	<.0001	0.0808	0.0665	0.2243
월실질임금 Scale	-0.0014	0.0002	<.0001	-0.0028	0.0006	<.0001
Weibull Shape	1.1807	0.0112		1.1778	0.0231	
	0.8469	0.0081		0.8491	0.0167	
	Log Likelihood=-10255.6			Log Likelihood=-2425.05		

주: 제조업의 경우 산업더미는 경공업=1임.

자료: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노동력 상태 사이의 이행행태가 산업·기업 특성별로, 인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이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특히, 노동시장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exclusionary risk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이행 원활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취업·미취업간 이행행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미취업기간과 취업기간이 공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번한 노동시장 이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을 보다 세분하면, 건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서비스업 종사인력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중년층,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짧고 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고령층,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길고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를 비롯한 이들 근로자집단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들을 파악하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촉진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고 미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등 취업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여성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취업으로의 이행을 유도·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제4장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제1절 문제제기

1. 사회양극화에 관한 기존 논의의 성과와 한계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양극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강신욱 등(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를 빈곤의 증가와 심화, 불평등의 변화, 중산층의 위축, 극화의 진행,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위축 등의 논리적 계기로 구분한 다음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각 현상을 표현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는 하나의 지표로 대표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빈곤의 확대, 불평등의 지속, 중산층의 위축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병희·강신욱 등(2007)은 분석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자영자 및 무직가구 등의 분배구조 변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그러한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과 소비의 분배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원수와 같은 변수만을 분석에 고려하였을 뿐이다. 둘째는 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양상에 주로 주목하였을 뿐, 소득분배 이후의 영역, 즉 노동력 재생산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 분석을 확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주로 가용

한 소득관련 미시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그 해소를 위한 정책의 모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였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이 연구는 길게는 외환위기 이후, 짧게는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과 소비구조의 불균등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을 크게 생산 분배, 재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분배와 재생산 과정에서의 주요 경제 사회적 변수들이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포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배구조 악화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대신 거기서서 한걸음 더 나아가 두 방향으로의 탐색을 시도할 것인데, 그 중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한 인과의 사슬을 거슬러 추적하는 것이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방향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미친 영향을 확장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차이는 소비영역에서의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기회의 차이를 초래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효과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킨다. 소득의 격차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교육기회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대간 격차의 대물림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명제이지만,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1996년에 비해 2006년의 빈곤률이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3절에서는 노동이동의 변화가 소득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지위 변화의 동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5절에서는 소비구조의 계층간, 세대간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6절에서는 교육수준이 주관적 건강의 격차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영향을 거치게 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2절 경제위기 이후 가구빈곤률 변화요인 분석

1. 문제제기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률 변화에 관한 연구는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 소득구성 및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빈곤률 차이의 요인 분해, Sen지수의 분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빈곤률의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시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구빈곤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가구빈곤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요인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6년과 2006년에 측정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빈곤률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가구빈곤률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구빈곤률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계층간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요인 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해 가구빈곤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요인 분해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이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가구빈곤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가구빈곤의 발생확률(poverty incidence)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된다. 먼저 빈곤선(Z)에 대한 가처분소득(Y) 비율(R)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 ($\log R = X\beta + e$)을 구축한다. 이때 X는 가구의 나이, 교육수준, 기능보유 여부, 건강상태, 근로능력상태, 경제활동상태와 가구의 재산 등 가구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이며, β 는 추정계수이고, e는 오차항이다. 다음으로 $\Pr(e < -X\beta) = \Phi(X\beta)$ 를 이용하여 가구빈곤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Gang, Sen and Yun(forthcoming)의 요인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집단간 빈곤률의 차이를 요인 분해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수적으로 두 집단간 빈곤발생확률의 차이, $(\overline{P_A} - \overline{P_B})$ 는 다음과 같이 수량효과(quantity effect)와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4-1)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수량효과로서 두 집단에 속하는 개인간 속성의 차이, 즉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동일한 개인적 속성이더라도 빈곤률에 미치는 정도가 집단간에 달리 나타나는 부분을 포착한다.

$$\overline{P_A} - \overline{P_B} = [\overline{\Phi(X_A \widetilde{\beta}_B)} - \overline{\Phi(X_B \widetilde{\beta}_B)}] + [\overline{\Phi(X_A \widetilde{\beta}_A)} - \overline{\Phi(X_A \widetilde{\beta}_B)}] \dots \dots \dots \text{식(4-1)}$$

여기서 Φ 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이며, $\widetilde{\beta}_A = -\beta_A / \sigma_A$, $\widetilde{\beta}_B = -\beta_B / \sigma_B$ 이다. 또한 β_A 와 β_B 는 각각 A와 B 집단에 대한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이며, σ_A 와 σ_B 는 추정오차의 표준편차이다. X_A 와 X_B 는 회귀분석에 이

용된 설명변수이며, 수식에 표시된 막대는 각 집단의 표본평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수량효과와 계수효과는 회귀방정식의 추정에 이용된 모든 설명변수의 영향을 총량적으로만 제시할 뿐 개별 설명변수 각각에 대한 수량효과와 계수효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설명변수 각각에 대해 요인별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Yun(2004)의 요인분해방정식(decomposition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1996년과 2006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이다. 1996년과 2006년의 가구단위의 빈곤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로 제한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3. 분석결과

1996년과 2006년의 가구빈곤률 및 변화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구빈곤률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에 이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먼저 1차 소득으로 측정된 평균가구소득은 1996년과 2006년에 각각 3,145,582원과 1,970,524원으로 동 기간에 5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OECD방식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소득수준은 동 기간에 1,045,983원에서 1,727,609원으로 증가하여 6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 가구특성별 가구빈곤률(1차 소득 기준)

(단위: %)

		절대적 가구빈곤률		상대적 가구빈곤률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전체		5.30	7.89	10.36	14.45
성별	남자	3.51	5.05	7.43	9.67
	여자	16.72	21.51	29.14	37.43
나이	20대 이하	6.49	5.70	13.38	13.49
	30대	4.68	6.16	8.58	11.49
	40대	5.71	7.17	9.90	13.05
	50대	3.64	6.41	8.11	12.26
	60대 이상	9.91	22.91	25.40	38.08
학력	초등졸 이하	12.80	20.19	24.05	33.88
	중학교	8.68	16.22	17.25	27.86
	고등학교	4.85	8.21	9.76	15.72
	전문대 이상	2.19	3.18	4.16	6.23
직업	공무원	0.31	0.43	0.96	0.91
	사무종사자	2.38	2.93	4.65	6.26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6.05	8.66	12.88	17.07
	임시 및 일용노무자	16.61	24.97	27.16	38.87
취업자수	1명	8.48	13.17	16.24	23.18
	2명	1.79	2.65	4.03	6.00
	3명 이상	0.27	0.94	0.51	1.83
가구원수	2명	4.34	10.67	14.80	21.48
	3명	6.68	8.29	11.50	15.63
	4명	4.18	5.87	7.72	10.11
	5명	6.21	7.76	10.62	11.50
	6명 이상	8.29	9.16	11.90	12.72
주택소유형태	자가	4.14	5.98	7.85	11.02
	무상	13.01	19.23	23.56	26.74
	사택	0.80	0.73	3.21	2.93
	전세	4.52	7.22	9.89	14.50
	보증부월세	10.30	13.85	18.38	24.59
	사글세	10.24	21.31	22.14	32.75
	월세	22.36	23.59	30.81	42.72
지역	서울	3.94	6.49	7.42	12.04
	기타 지역	5.94	8.38	11.76	15.28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2〉 기초통계량

(단위: %)

		1996년		2006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차 소득		1,970,524	1,115,186	3,145,582	1,972,555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1차 소득		1,045,983	585,570	1,727,609	1,080,818
성별	남자	86.52		82.83	
	여자	13.48		17.17	
나이	20대 이하	15.01		5.75	
	30대	40.33		32.55	
	40대	24.45		34.55	
	50대	15.38		19.04	
	60대 이상	4.82		8.10	
학력	초등졸 이하	10.68		7.76	
	중학교	13.16		10.90	
	고등학교	42.03		39.06	
	전문대 이상	34.13		42.28	
직업	공무원	9.22		9.02	
	사무종사자	34.22		35.85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46.89		42.80	
	임시 및 일용노무자	9.68		12.33	
취업자수	1명	54.19		50.94	
	2명	37.18		41.07	
	3명 이상	8.63		7.99	
가구원수	2명	15.39		22.38	
	3명	26.87		29.15	
	4명	41.32		37.60	
	5명	12.04		8.67	
	6명 이상	4.38		2.20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1996년과 2006년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중학교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이의 경우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내며,⁴⁾ 여자 가구주의 경우 남자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 빈곤선 대비 소득비중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선 대비 소득비중이 높지만, 2006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학력소지자에 비해 가구소득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공무원, 사무직 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회귀분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6년과 2006년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각각 47.2세와 46.1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한다.

〈표 4-3〉 회귀분석결과(MLE)

	1996년	2006년
상수	-1.438(0.047)***	-2.206(0.055)***
나이	0.067(0.002)***	0.094(0.002)***
나이 제곱/100	-0.071(0.003)***	-0.102(0.003)***
가구규모	-0.109(0.003)***	-0.123(0.003)***
취업자수	0.352(0.004)***	0.379(0.005)***
성별(비교집단=남자)		
여자	-0.320(0.009)***	-0.383(0.010)***
교육(비교집단=초등학교졸 이하)		
중학교	0.086(0.011)***	-0.065(0.015)***
고등학교	0.213(0.010)***	0.105(0.015)***
전문대학 이상	0.312(0.013)***	0.270(0.017)***
종사상지위(비교집단=임시/일용노무자)		
공무원	0.563(0.013)***	0.864(0.015)***
사무종사자	0.451(0.012)***	0.670(0.014)***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0.215(0.010)***	0.401(0.012)***
σ	0.437(0.003)***	0.509(0.005)***
관측치	38,872	36,226
Log Likelihood	-22,923	-27,718

- 주: 1) 관측치는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 종속변수는 $\log(1차소득/상대적 빈곤선)$.
 3) 괄호안의 수치는 이분산의 문제를 해결한 표준오차이며,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요인분해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해에 이용된 1996년과 2006년의 가구빈곤률 차이는 상대적 가구빈곤률의 기대치이다. 1996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1차 소득 기준 상대적 가구빈곤률은 10.36%이고, 2006년의 상대적 가구빈곤률은 14.45%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6년의 상대적 가구빈곤률의 기대치의 차이(5.9%=17.2%-11.3%)를 요인분해에 이용하였다.

요인분해결과를 보면 1996년과 2006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적 가구빈곤률의 차이는 -34.2%의 수량효과(quantity effect)와 134.2%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효과의 경우 모든 계수값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계수효과의 경우 성별, 나이, 가구규모 변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수량효과를 보면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와 직업구성 변화는 1996년과 2006년 사이의 가구빈곤률 차이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와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규모 및 가구내 취업자 수의 분포 변화는 두 시점간 가구빈곤률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계수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내 취업자수는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과 나이, 직업, 그리고 가구규모는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가구주 성별의 경우, 여성가구라는 특성이 남성가구라는 특성에 비해 빈곤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는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구주 나이의 경우에도 저연령과 고연령이 빈곤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구주의 나이가 가구빈곤률 변화에 미치는 계수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산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 차이와 가구내 취업자수는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가구규모는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나이와 가구규모 및 가구내 취업자수가 가구빈곤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가구주의 성별, 나이, 경제활동상태가 가구빈곤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구빈곤률 차이의 요인분해

(단위: %)

	합계		수량효과		계수효과	
	추정치	비중	추정치	비중	추정치	비중
총효과	0.059	100.0	-0.021(0.001)***	-34.2	0.080(0.002)***	134.2
상수	0.171	288.0	-	-	0.171(0.028)***	288.0
성별	0.002	3.8	0.003(0.001)***	5.6	-0.001(0.002)	-1.8
나이	-0.112	-189.9	-0.009(0.001)***	-15.5	-0.103(0.028)	-174.4
교육수준	-0.001	-0.7	-0.005(0.001)***	-8.1	0.004(0.002)***	7.4
종사상지위	-0.002	-4.0	0.001(0.000)***	1.2	-0.003(0.001)***	-5.2
가구규모	-0.012	-20.6	-0.008(0.001)***	-13.0	-0.004(0.005)	-7.6
취업자수	0.013	23.4	-0.003(0.000)***	-4.4	0.016(0.004)***	27.8

이와 같은 요인분해 결과는 가구주 및 가구의 속성에 따른 가구빈곤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표 4-1>에서 가구내 취업자수에 따른 가구빈곤률의 변화를 보면,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상대적 가구빈곤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내 취업자수에 따른 가구빈곤률의 변화와 취업자수의 분포를 반영하여 수량효과는 동 기간에 가구빈곤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계수효과는 동 기간에 가구빈곤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상대적 가구빈곤률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절대적 가구빈곤률의 변화와 요인분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구빈곤률의 축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가구내 취업자 수의 차이가 가

구빈곤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증대한 것을 볼 때,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가 빈곤확률을 낮추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대변화에 따라 저학력 가구가 전체 가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저학력가구가 겪는 빈곤위험이 더욱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빈곤위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의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구의 계수효과는 음수로 나타났으나 수량효과가 계수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볼 때, 여성가구의 빈곤화 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구의 다른 인구학적 특성과는 달리 여성가구의 양적 증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수효과를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구의 취업률 증가는 물론 경제 활동 참가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여성취업의 수요 및 공급 모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노동이동의 형태와 소득변동

1. 문제제기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

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쉽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일자리 감소와 노동이동의 증가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4년간 노동이동의 증가가 가구소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이동이 해당 가구의 소득지위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노동이동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지위 변동의 총량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우리사회의 노동이동이 소득의 하향이동을 초래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이동의 단위 증가가 소득지위 변동에 미치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취업상태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즉 ①<취업·미취업 간 노동이동>, ②<업종 간 노동이동>, ③<임금·비임금 간 노동이동>, ④<종사상지위 간 노동이동> 등이 모두 취업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각각의 변화형태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변동(Labor Turnover)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동일한 사건(Event)으로 간주할 것이다. 다만, 이동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구분할 것이다.

소득변화와 취업상태 변화를 연결지우면, 각 개인에게 나타난 노동이동이 근로소득의 증감과 관련지어 상향이동인지 하향이동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근로소득 정보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가구소득을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빈곤가구는 연간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설정된 상대 빈곤선을

활용하여 판별하고, 이 변수를 패널화된 데이터에 연결하여 활용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빈곤은 가구단위의 개념이며 연간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취업상태 변화는 개인단위의 개념이자 월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연간단위 평균소득은 취업상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월 단위로 통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패널화된 데이터에 한 해, 연간단위 평균소득을 토대로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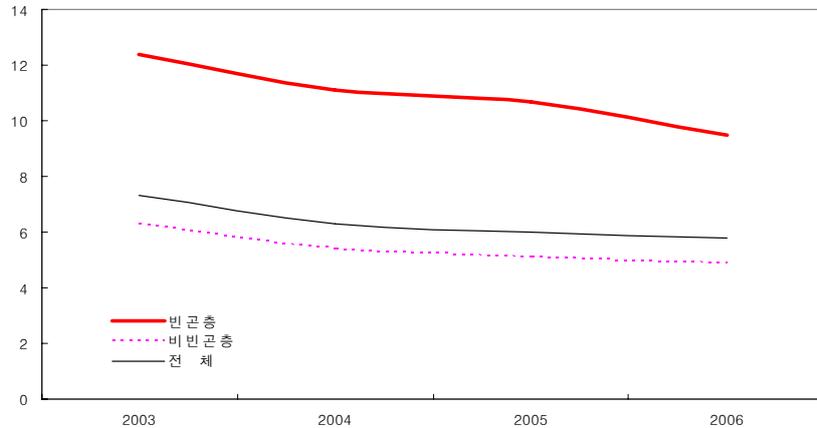
소득지위 또는 빈곤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지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서 결정요인 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취업과 관련된 요인의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노동이동량이 가구 및 개인단위의 소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그리고 부가조사)와 전국가계조사(전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가구 및 개인단위 월별 패널데이터로 가공하였다. 이는 주로 개인의 노동이동 경험이 해당 가구의 소득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그리고 월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분석목적에 따라 가구소득의 변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주로 가구원 또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통제하였다. 개인의 근로소득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을 가구주와 배우자로 통제하였다.

3. 노동이동의 형태와 소득변동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5세 이상 인구집단 중 각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간, 분기, 월별로 고용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4-1]은 전체 표본집단을 시장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이 전체 그리고 연도별로 노동이동을 경험한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4년 평균 빈곤층의 노동이동 경험 비율은 10.9%로 비빈곤층의 노동이동 경험율 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림 4-1] 전체 표본집단의 소득계층별 연도별 총 노동이동율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4-5>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동율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집단별로는 24세 이하가 가장 높고, 55~64세 연령집단이 다음으로 높은 이동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이동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이동 경험 유무

		노동이동 경험 유무		
		없음	있음	전체
성별	남 자	94.7	5.3	100.0
	여 자	92.7	7.3	100.0
연령	15~24세	88.0	12.0	100.0
	25~34세	93.9	6.1	100.0
	35~44세	93.6	6.4	100.0
	45~54세	93.5	6.5	100.0
	55~64세	93.0	7.0	100.0
	65세 이상	95.5	4.5	100.0
교육수준	초 졸	91.8	8.2	100.0
	중 졸	92.0	8.0	100.0
	고 졸	93.4	6.6	100.0
	초대졸	95.0	5.0	100.0
	대 졸	96.3	3.7	100.0
	대학원졸	97.6	2.4	100.0
합계		93.6	6.4	100.0

노동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지난 4년간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동이 주목해야 할 현상이고, 각 노동이동 형태가 개인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노동이동의 형태란 t시점의 종사상지위와 t+1시점의 종사상지위를 결합시킨 것이다. 다만 분석목적이 임금근로자로부터의 이탈과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임금근로자는 하나의 범주로 단순화하였다.

<표 4-6>은 t시점의 종사지위에서 다른 종사지위로 이탈한 경로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변동집단 내 비중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임시직 → 비경제활동인구 → 비임금 근로자 → 실업자 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시직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 → 상용직 근로자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용직 근로자 → 임시직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 → 임시직 근로자 → 실업자 순으로 이동하고 있고, 비임금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 → 임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순으로, 실업자는 임시직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간에 노동이동의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상용직은 임시직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어지는 노동이탈의 흐름을 형성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탈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표 4-6〉 4년간 15세 이상 비학생인구의 종사지위 및 취업상태 변화

이 탈 (t시점 종사지위 기준)					
t	t+1	케이스	전체의 %	집단내 %	변동집단 내 %
상용직	상용직	104,688	35.14	98.2	
	임시직	678	0.23	0.6	34.8
	일용직	132	0.04	0.1	6.8
	비임금	300	0.10	0.3	15.4
	실업자	265	0.09	0.2	13.6
	비경활	573	0.19	0.5	29.4
	소 계	106,636	35.79	100.0	100.0
임시직	상용직	961	0.32	1.5	21.5
	임시직	57,930	19.44	92.8	
	일용직	638	0.21	1.0	14.2
	비임금	632	0.21	1.0	14.1
	실업자	593	0.20	1.0	13.2
	비경활	1,656	0.56	2.7	37.0
	소 계	62,410	20.95	100.0	100.0
일용직	상용직	144	0.05	0.5	3.1
	임시직	1,004	0.34	3.4	21.6
	일용직	25,168	8.45	84.4	
	비임금	357	0.12	1.2	7.7
	실업자	557	0.19	1.9	12.0
	비경활	2,583	0.87	8.7	55.6
	소 계	29,813	10.01	100.0	100.0
비임금 근로자	상용직	262	0.09	0.3	11.7
	임시직	613	0.21	0.8	27.4
	일용직	386	0.13	0.5	17.2
	비임금	75,894	25.47	97.1	
	실업자	170	0.06	0.2	7.6
	비경활	807	0.27	1.0	36.1
	소 계	78,132	26.22	100.0	100.0
실업자	상용직	229	0.08	7.5	11.2
	임시직	690	0.23	22.5	33.8
	일용직	666	0.22	21.7	32.6
	비임금	258	0.09	8.4	12.6
	실업자	1,027	0.34	33.5	
	비경활	197	0.07	6.4	9.7
	소 계	3,067	1.03	100.0	100.0

〈표 4-6〉 계속

이 달 (t시점 종사지위 기준)					
t	t+1	케이스	전체의 %	집단내 %	변동집단 내 %
비경제 활동인구	상용직	360	0.12	2.0	6.1
	임시직	1,682	0.56	9.4	28.7
	일용직	2,593	0.87	14.5	44.3
	비임금	809	0.27	4.5	13.8
	실업자	410	0.14	2.3	7.0
	비경활	12,030	4.04	67.3	
	소 계	17,884	6.00	100.0	100.0
전 체		297,942	100.00		

<표 4-7>은 노동이동의 형태별로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우측의 증감 폭은 t+1시점의 가구소득에서 t시점의 가구소득을 뺀 값의 평균값이다. 먼저 t+1시점에 상용직 근로자로 진입한 근로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임시직 및 비임금 근로자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비임금 근로자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의 경우에는 그 감소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임금 근로자의 t시점 가구소득이 매우 높았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용직으로 진입한 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임시직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 중 상용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은 임시직 근로자에서 진입한 집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이 가구의 두 번째 소득원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임금 근로자로 진입한 집단과 관련해서는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구

소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로 진입한 집단은 모든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감소 폭은 상용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 노동이동 형태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노동이동의 형태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t시점	t+1시점	t시점	t+1시점	증감폭
상용	상용직	2,049,957	2,055,650	5,693
임시		1,468,270	1,446,280	-21,990
일용		1,340,250	1,388,668	48,418
비임금		2,106,483	1,873,327	-233,155
실업		823,230	1,045,822	222,592
비경활		1,252,001	1,539,055	287,054
소계(상용직 진입)		2,038,339	2,044,612	6,273
상용	임시직	1,514,340	1,474,685	-39,655
임시		1,466,160	1,479,212	13,052
일용		1,193,408	1,257,642	64,234
비임금		1,405,913	1,353,711	-52,202
실업		849,118	1,031,676	182,558
비경활		1,086,532	1,257,075	170,543
소계(임시직 진입)		1,442,998	1,462,197	19,200
상용	일용직	1,270,010	1,300,873	30,863
임시		1,113,688	1,113,095	-593
일용		1,150,003	1,169,021	19,018
비임금		1,097,653	1,204,735	107,082
실업		786,742	930,562	143,820
비경활		907,701	1,055,934	148,233
소계(일용직 진입)		1,114,851	1,151,027	36,176
상용	비임금근로자	1,631,831	1,556,862	-74,970
임시		1,442,672	1,441,295	-1,377
일용		1,171,514	1,201,868	30,353
비임금		1,520,526	1,528,704	8,178
실업		821,604	1,135,913	314,309
비경활		1,125,008	1,284,659	159,650
소계(비임금근로자 진입)		1,510,513	1,521,763	11,250

〈표 4-7〉 계속

노동이동의 형태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상용	실업자	1,321,658	825,176	-496,483
입시		1,128,250	830,945	-297,305
일용		973,057	834,213	-138,844
비임금		1,201,012	738,370	-462,642
실업		743,041	737,073	-5,968
비경활		960,102	938,070	-22,032
소계(실업자 진입)		897,230	799,303	-97,927
t시점	t+1시점	t시점	t+1시점	증감폭
상용	비경제활동인 구	1,792,419	1,317,113	-475,305
입시		1,381,558	1,179,309	-202,249
일용		1,126,062	993,408	-132,654
비임금		1,386,189	1,107,899	-278,290
실업		921,246	948,207	26,961
비경활		1,269,464	1,272,534	3,070
소계(비경활 진입)		1,269,597	1,261,551	-8,046
전 체		1,518,924	1,524,706	5,782

4. 노동이동의 결정요인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동이 증가하는가에 따라 전체 소득분배구조 및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비학생 가구주 및 배우자로 통제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은 경제활동인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아래 분석결과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는 대상집단을 연령 및 교육수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인 집단으로 통제하였다.

<표 4-8>은 노동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먼저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동 경험율이 7.3%로 남성의 5.3%에 비해 높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4세 이하 집단에 비해 35~44세 집단은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45~54세 집단은 기준집단에 비해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중졸이하 학력자와 고졸자가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가구특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는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 또는 사별자가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혼인 경우에는 그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가구 내 취업자 수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가구원의 노동이동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자 수가 1명 증가하면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t시점의 종사상지위 및 취업특성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가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은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나며, 일용직은 무려 6.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가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는 구직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노동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중이 낮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끝으로 해당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소득지위가 해당 가구원의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지위가 상향 이동할수록 해당 개인의 노동이동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

		노동이동=1		
		B	S.E.	Exp(B)
인구특성	성별(r=남성)	0.054**	0.017	1.056
	연령(r=34세 이하)			
	35~44세	0.035*	0.020	1.036
	45~54세	-0.093***	0.025	0.912
	55세 이상	-0.341***	0.028	0.711
	교육수준(r=대졸이상)			
	중졸이하	0.335***	0.025	1.398
	고졸	0.190***	0.021	1.209
가구특성	혼인상태(r=유배우)			
	이혼사별	0.116***	0.032	1.123
	미혼	0.476***	0.046	1.609
	취업자 수	0.167***	0.012	1.182
	주거형태(r=자가)			
	전세	0.073*	0.037	1.076
	월세	0.131***	0.039	1.140
	무상/기타	0.272***	0.040	1.313
	지역(r=동부)	-0.106***	0.018	0.900
취업특성	취업지위(r=상용직)			
	임시직	1.176***	0.031	3.240
	일용직	1.836***	0.032	6.273
	비입급근로자	0.727***	0.031	2.070
	실업자	2.930***	0.047	18.726
	비경활자	0.441***	0.039	1.554
노동시간	-0.015***	0.001	0.985	
가구소득	소득5분위	-0.154***	0.006	0.857
Constant		-3.035***	0.056	
-2LL		173966.146		
Chi-Square		47099.97		

다음으로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①노동이동 횟수(Labor_M), ②가구소득 내 비근로소득의 비중(Percent_Inc), ③가구 내 취업자 수(Earner_N)로 구성된다. 끝으로 분석대상은 2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응답한 임금근로자로 제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가구소득(Income_1)은 만원단위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4-9>과 같다. 분석 모형 가운데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모형 II])는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저학력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24개월 이상 응답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모델에서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면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가구원이 한 명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 가구소득에서 비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 III]와 [모형 IV]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9>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 I] 전체 집단		[모형 II] 저학력자		[모형 III] 고졸자		[모형 IV] 고학력자	
	B	Std. Error						
Labor_M	-12.754** *	0.452	-6.390***	0.929	-13.867***	1.025	-28.702***	2.191
Earner_N	91.791***	1.363	94.349***	1.878	88.491***	2.311	125.061***	4.132
Percent_Inc	0.747***	0.034	0.007	0.047	0.174***	0.064	0.034	0.124
(Constant)	171.748** *	2.374	69.516***	3.943	152.510***	3.862	186.370***	6.580
R2	0.193		0.374		0.157		0.164	

5 정책적 시사점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 정책현안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상당수가 매우 취약한 일자리였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지출이 확대된다고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빈곤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저임금·고용불안·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노동이동은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과 비경제활동인구 간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이동량의 증가는 소득분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노동의 하향이동을 억제하는 대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노동이동량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분석대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저학력자에게서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노동이동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이동량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구원의 취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취약계층의 가구특성상 이러한 변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은 가구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불완전취업자에게는 고용안정 또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노출된 집단에게는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소득분배상의 지위로 본 자영업자의 특성 분석

1. 자영업자 소득분배 특성 분석의 필요성

최근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함께 자영업 부문의 부진이 지적되어 왔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따를 경우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구조 변화를 분석할 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큰 비중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자영자가구는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의 인구 비율(자영자 8.54%, 근로자 6.61%), 중졸이하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인구 비율(자영자 16.9%, 근로자 19.3%)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자영업자(이하 자영자)의 소득분배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른바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이 충분히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자영자 가계의 소득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자의 소득실태 및 변동과, 그것이 전체 사회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다행히도 2003년 이후부터는 통계청이 도시는 물론 농어촌의 근로자 및 자영자 가계에 관한 소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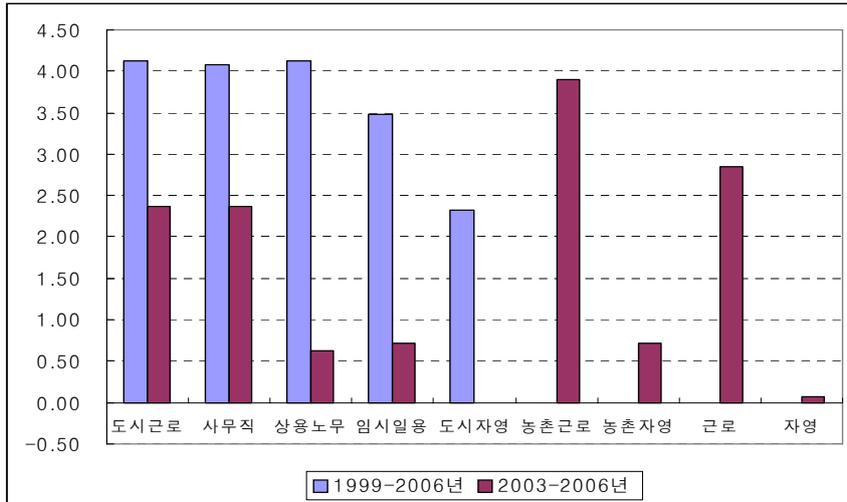
보를 제공하고 있어, 비록 한정된 시계열에 해당되지만 자영자 가계의 소득분배 실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03~'06)>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자의 소득분포 및 소득계층 이동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영자 소득분포의 특성

각 년도 도시근로자가계의 실질시장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집단의 실질시장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 '99-'06년 평균을 보면 도시자영자는 도시근로자에 비해 94.1%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는 도시 상용노무자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도시 사무직 근로자의 약 76.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대비 상대적 소득은 '03-'06년간에는 92.2%로 하락하여, '03년 이후 도시자영자와 도시근로자의 상대적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질소득의 격차는 이 기간동안의 각 소득범주별 증가율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그림 4-2]는 '99~'06년간의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율과 도시자영자 사업소득 증가율, '03~'06년간 도시, 농촌, 전체의 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율과 자영자 사업소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자영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도시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낮다. '03~'06년 사이에는 도시자영자와 전체 자영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거의 0이거나 (-)였으며, 농촌자영자만 0.5%를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요컨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는 소득의 크기 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율 또한 낮았으며, 그 격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2]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과 자영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비교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근로자와 자영자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분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자 하위 분위의 소득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하위 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증가율이 각 집단 전체의 평균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예컨대 도시근로자 전체의 평균 실질시장소득 증가율은 2.73%인 반면 1분위 도시근로자의 경우는 1.69%, 2분위 도시근로자는 2.06%로 평균을 밑돈다. 이러한 사정은 도시자영자와 전체 자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측되나, 자영자의 경우 1분위의 실질시장소득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03~'06)

	단위(%)			
	도시근로	도시자영	전체근로자	전체자영자
전체	2.73	1.68	3.18	1.65
1분위	1.69	-1.35	2.72	-1.28
2분위	2.06	1.12	2.71	1.42
3분위	2.93	1.48	3.33	1.77
4분위	3.24	1.94	3.58	1.66
5분위	2.82	2.24	3.11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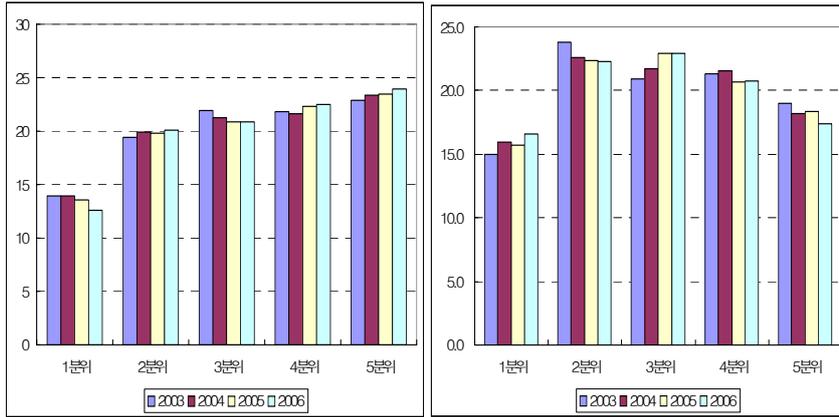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자영자 소득분포상의 특징을 보기위해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표본 상에서 소득 분위(10분위 또는 5분위)를 나눈 다음, 자영자가 어느 분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분위를 산출하는 데에는 (가구규모에 따라 균등화 된) 시장소득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4-3]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영자가구가 각 소득분위에 포함될 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 기간동안 근로자 가구가 1분위에 속할 확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4, 5분위에 속할 확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영자 가구의 경우는 1분위에 속할 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분위와 5분위에 속할 확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분위에 속할 확률의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자의 소득 지위상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2분위에서 1분위로, 4분위에서 3분위로의 이동이 일어난다면 자영자의 소득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향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영자의 소득지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4-3] 근로자와 자영자의 분위별 분포확률 변화



(a) 근로자

(b) 자영자

자영자 가구가 3분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 경향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동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상위 계층의 하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영자의 이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동태적 분석 필요하다.

3. 자영자 소득지위 변화의 동태적 특성

소득의 변동의 계절성을 감안할 때 소득 분위의 변동은 연간 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충분한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서는 소득의 분기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위 변동을 관찰하였다. 소득분위의 변동 여부는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4-11>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소득분위의 상승, 불변, 하락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근로, 자영, 무직가구를 포함

한 전 가구의 경우 전체 기간동안 분위 상승을 경험한 가구는 23.8%로 분위 하락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과 거의 같았다. 전기 대비 분위가 변화하지 않은 가구는 52.4%였다. 근로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를 비교할 경우, 근로자 가구는 상승 경험이 25.5%, 하락경험이 22.3%였고, 자영자 가구는 상승경험이 24.8%, 하락경험이 24.6%여서 자영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승경험 비율은 낮고 하락 경험 비율은 더 높았다. 불변가구의 비율도 근로자 52.3%에 비해 자영자 50.7%로 낮아, 자영자의 소득지위 변동이 약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보면 근로자와 자영자 가구 모두 하락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영자 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다.

〈표 4-11〉 '03-'06년간 소득분위 변화 경험 가구 비율

(단위: %)

	전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상승	23.8	20.0	25.9	24.0	24.2	25.5	20.6	27.7	25.8	26.7	24.8	21.7	26.8	25.1	24.6
불변	52.4	59.4	50.1	51.0	50.7	52.3	59.5	50.0	50.9	50.2	50.7	56.6	48.6	49.6	49.0
하락	23.8	20.6	24.0	25.0	25.1	22.3	19.9	22.3	23.3	23.1	24.6	21.7	24.6	25.2	26.4

자료: '03-'06년 가계조사 연결자료

4. 자영업 진입·탈피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

자영자 가구로의 진입과 자영자 가구로부터의 탈피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를 분석해 보면 자영업이 전체적인 소득분위의 변동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자영업으로의 진입시 소득분위 하락

을 경험하는 가구가 많으나 자영업에서 이탈시 소득분위 상승을 경험하는 가구가 많다면, 자영업은 소득분위 상승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시 소득분위 하락이 많고 자영업에서의 이탈 시에도 소득분위 하락이 많다면, 자영업은 빈곤에 이르는 경유지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빈곤층의 소규모 창업지원이 중요한 탈빈곤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후자의 경우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자영업 창업은 권장하지 못할 일인 것이다.

분석 결과 자영자로의 진입 시 소득분위의 상승을 경험한 가구는 38.5%이고 하락을 경험한 가구는 37.2%였다. 반면 자영업에서 탈피하면서 상승을 경험한 가구는 36.3%였고, 하락을 경험한 가구는 40.4%였다. 즉 진입 시에는 소득분위 상승을 경험하는 확률이 높지만, 탈피시에는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2004년에 자영 진입과 탈피가구 모두 계층상승을 경험한 확률이 높았고, 이후는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자영 진입과 탈피가구의 소득분위 하락 확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여서, 자영자 풀이 소득분위 상승보다는 하락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4-12〉 '03-'06년간 자영자 입·출과 소득분위 변화

(단위: %)

	자영진입가구					자영탈피가구					자영유지가구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전 기간	2003	2004	2005	2006
상승	38.5	32.2	40.9	37.8	37.7	36.3	20.5	40.7	35.1	35.1	21.3	21.0	22.3	21.3	20.2
불변	24.3	41.7	23.1	23.5	22.9	23.3	42.5	22.6	21.8	22.3	57.4	57.6	56.8	57.6	57.7
하락	37.2	26.1	35.9	38.8	39.4	40.4	37.1	36.7	43.1	42.7	21.3	21.4	20.9	21.1	22.0

자료: '03-'06년 가계조사 연결자료

자영업으로의 진입 전후의 소득분위 변동은 구체적인 경우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표 4-13>을 보면 진입 이전 1분위의 경우 진입가구의 약 73%가 진입과 동시에 분위 상승을 경험하였고, 2분위였던 가구 가운데는 상승비율이 약 53%이다. 3분위 이후로는 상승비율과 하락비율이 역전된다. 3분위는 약 36%가 상승, 약 42%가 하락을 경험하면서 진입하였다.

진입과 동시에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가 하락하고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셀의 수치를 분위 평균값과 비교한 후 평균값보다 큰 경우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다. 하위분위인 1, 2분위의 경우 과거 사무직 가구는 진입과 동시에 분위가 상승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1분위 사무직에서 진입하는 경우 상승확률이 약 76%로, 이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상승확률 73%를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2분위의 경우 상용노무가구로부터 진입하는 가구의 상승확률도 분위 평균 상승확률보다 높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으로부터의 진입가구인 경우 절대적인 비율은 상승가구가 높으나 2분위 평균 상승확률보다는 낮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때, 하위 분위에서는 여성 진입가구의 상승확률이 높고 고령의 가구와 저학력 가구의 분위상승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4, 5분위에서는 사무직으로부터 진입하는 가구의 하락확률이 높았으며, 4분위 상용 및 임시 일용 노무직 출신가구의 하락확률도 높았다. 남성가구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고학력 가구의 하락확률 또한 높게 나타난다. 3,40대에서는 자영진입에 대한 하락확률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4-13> 자영진입에 따른 소득분위 상승·하락 가구의 비교

단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분위 평균	72.7	52.8	18.4	35.6	42.3	17.7	61.1	79.6
공무원	66.6	50.7	15.4	36.9	44.4	24.5	58.4	84.7
사무직	75.7	55.3	18.0	35.8	38.7	18.8	59.1	80.3
상용노무	72.1	53.0	17.4	35.1	45.6	15.4	65.0	79.2
임시일용	75.5	51.3	18.8	37.2	38.4	17.4	65.1	75.5
무직	71.2	52.0	20.2	33.4	48.0	13.1	51.4	66.7
남성	71.4	52.7	18.0	34.7	43.5	16.5	62.1	80.7
여성	75.5	53.3	19.7	40.5	36.1	24.0	55.7	72.1
20대이하	78.8	57.2	19.7	42.1	29.8	13.3	72.3	87.5
30대	71.2	51.4	18.3	33.5	43.2	17.5	60.0	82.9
40대	67.6	51.5	18.3	39.7	41.3	19.5	59.5	79.0
50대	72.5	57.6	18.8	31.7	43.8	16.2	62.5	75.2
60대이상	77.1	52.3	18.1	30.3	52.5	17.1	61.3	75.8
초졸이하	75.1	53.8	13.9	33.9	36.0	13.3	65.4	89.6
중졸	76.1	50.1	19.7	38.2	49.5	17.8	65.6	68.7
고졸	70.1	51.1	19.6	36.1	43.1	20.1	57.6	76.7
초급대졸	70.8	54.7	13.9	25.6	38.8	16.0	64.9	84.8
대학이상	72.1	57.5	19.4	37.9	40.7	16.2	61.7	81.7
상인	67.2	47.2	21.4	28.6	48.4	12.5	67.5	85.8
고용주	82.1	63.1	11.4	46.3	31.3	23.4	52.6	76.5
기타	94.8	66.5	16.6	61.7	27.3	36.4	43.9	45.4

자료: '03-'06년 가계조사 연결자료.

<표 4-14>는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자영가구로의 탈피에 따라 소득 분위의 상승·하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1분위에서 탈피한 가구

의 경우 64%가 상승했고, 2분위 탈피가구는 52.6%가 상승, 25.8%가 하락했다. 3분위부터는 하락가구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데, 3분위의 경우 38.8%가 상승을, 43%가 하락을 경험하였다.

1분위 자영가구 가운데 고용주나 기타 자유업자나 경영자였던 경우 탈피에 따른 상승확률이 높았다. 하위분위에서는 중·고령층가구와 고학력가구에서 탈피와 동시에 상승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예컨대 1분위 50대 가구의 경우 자영탈피와 동시에 소득분위 상승확률이 65.7%로 1분위 평균값인 64.2%보다 높았으며, 2분위 50대의 경우도 상승확률이 56.8%로 평균값 52.6%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분위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각 셀에 진한색으로 표기하였다.

반면 상위 분위에서는 4, 50대의 하락확률이 높고 남성가구의 하락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4분위 40대의 하락확률은 63.5%로 4분위 평균값인 62.9%를 상회하였으며, 5분위 40대도 79%의 높은 하락확률을 보이면서 분위 평균값 76.2%를 웃돌고 있다. 연령 면에서는 남성 40대의 경우 3분위 이상 모든 분위에서 하락확률이 분위 평균값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표 4-14〉 자영진입에 따른 소득분위 상승·하락 가구의 비교

(단위: %)

탈피이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분위 평균	64.2	52.6	25.8	38.8	43.0	18.8	62.9	76.2
상인	64.1	52.1	25.6	36.5	45.2	20.8	59.8	75.1
고용주	62.1	55.0	23.8	41.2	39.0	16.1	68.4	77.7
기타	74.2	38.5	53.6	43.9	24.0	19.2	64.3	82.7
남성	65.3	52.3	25.7	38.9	42.9	19.1	63.8	76.5
여성	60.5	55.1	26.2	37.9	43.3	15.9	54.9	74.0
20대이하	59.9	38.1	46.1	48.3	36.4	26.7	55.0	83.6
30대	62.4	52.5	29.0	39.0	39.7	17.4	63.6	70.7
40대	64.6	51.1	23.9	38.3	44.4	17.8	63.5	79.0
50대	65.7	56.8	23.8	40.0	42.8	20.5	65.2	77.0
60대	65.1	57.2	21.8	34.7	50.0	23.1	49.7	71.3
초졸이하	59.4	51.1	23.6	36.1	49.1	10.9	67.3	81.6
중졸	63.9	59.7	22.7	40.5	47.0	23.4	59.4	76.6
고졸	67.2	49.7	28.2	36.9	44.5	20.6	60.9	78.4
초급대졸	50.9	38.9	26.9	47.6	23.3	20.6	54.2	87.2
대학이상	65.1	60.7	22.0	40.4	40.6	15.7	68.3	71.7
공무원	100.0	96.4	0.4	86.2	1.8	48.4	26.9	58.4
사무직	87.9	75.2	5.1	58.8	18.6	36.8	40.7	60.2
상용노무	82.6	57.0	17.2	35.2	43.1	12.9	62.4	84.6
임시일용	50.7	33.0	33.8	17.2	67.9	5.5	83.0	87.9
무직	24.5	19.5	66.6	15.5	73.6	5.0	87.6	85.2

자료: '03-'06년 가계조사 연결자료

자영으로의 진입과 자영으로부터의 탈피에 관한 이상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영가구의 입·출 집단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여성 및 고령, 저학력 가구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소득분위의 상향이동을 동반하는 확률이 높다. 특히 1분위의 임시일용직 가구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소득분위 상승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고분위에서는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전반적인 하락 경향이 뚜렷했고, 특히 고학력자, 남성, 50~60대에서 하락확률이 높다. 30~40대는 진입 당시에는 하락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탈피시에는 하락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이 소득지위 하락 과정의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정책적 함의

자영업 가구의 소득분위 상승 경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반대로 소득분위 하락 경험확률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탈피는 주로 하위 분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입과 탈피시 모두 소득분위 하락을 경험하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나, 자영업이 소득지위 상승의 경로보다는 하락의 경로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입이나 이탈시 상승을 경험하는 집단과 하락을 경험하는 집단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저학력, 노인, 여성가구의 경우 자영업은 소득분위 상승의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고령, 고학력, 남성가구의 경우 자영업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후자의 집단에 대해서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상용노무직으로부터의 진입이 임시일용직으로부터의 진입에 비해 더 높은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용 → 임시일용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재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것이다. 가능한 한 근로자가구로서의 지위를 유

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소득악화를 막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길일 것이다. 반면 자영업을 경유하여 소득분위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여성 및 고령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확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창업지원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에 더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소비구조의 계층간, 세대간 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틀

사회양극화가 분배구조의 특수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는 양극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소비구조를 개인 혹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같은 욕구를 좌우하게 되는 변인이 바로 소비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 소비 욕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과 생애주기이다. 본 연구에서 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한 양극화 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소득과 생애주기라는, 소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2. 소득계층별 소비구조의 변화 경향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전체적인 양상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표 4-15>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1분위는 5분위, 혹은 10분위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아, 수입을 초과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분위의 가

계수지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행보를 하고 있다. 5분위의 경우 1분위처럼 적자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수입의 70-80%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5분위의 경우 외환위기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이전의 소비성향이 유지되었으며 오히려 그 이후에 소비성향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0분위 가구의 경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비성향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같은 경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각 계층의 소비성향 변화 경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이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반면 고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4-15〉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변화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분위	1.14	1.14	1.4	1.4	1.28	1.3	1.26	1.42	1.46	1.41	1.39
5분위	0.78	0.74	0.75	0.83	0.85	0.86	0.83	0.82	0.83	0.81	0.79
10분위	0.62	0.6	0.51	0.57	0.59	0.57	0.55	0.56	0.59	0.58	0.58

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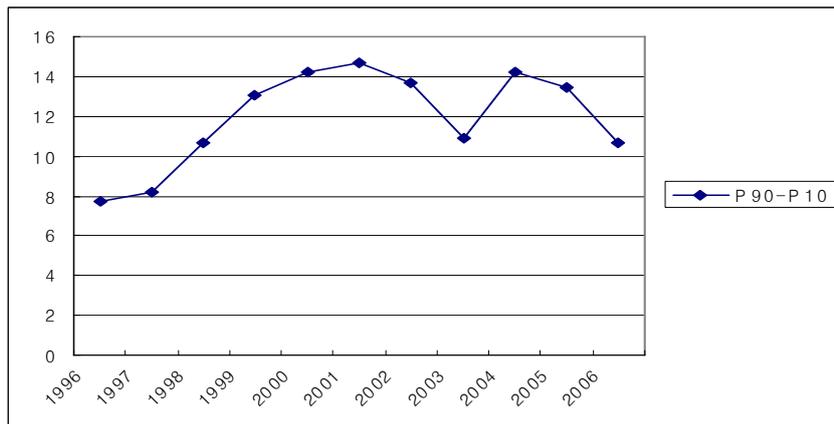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구의 소비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 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방식은 재화의 소득(지출) 탄력성에 기반해 선택재와 필수재로 구분하도록 한다. 즉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선택재로, 1보다 작으면 필수재로 구분한다. <표 4-16>은 중범위 소비항목의 탄력성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출탄력성을 구해보면 식료품, 광열수도, 교통통신 등이 필수재에 해당하는 항목인 반면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기타지출 등이 선택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표 4-16〉 소비비목별 지출탄력성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 기가사 용품	의류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지출
0.5876	1.7137	0.4543	1.4389	2.1807	1.0496	2.0623	1.2378	0.9613	1.2507
필수재	선택재	필수재	선택재	선택재	선택재	선택재	선택재	필수재	선택재

[그림 4-4] 소득계층별 선택재 지출 비율(백분율) 차이(P90-P10)



[그림 4-4]는 10분위와 1분위의 선택재 지출비율의 차이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즉, 그림상에서 y축은 10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선택재 지출 비율(백분율)의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양 계층의 선택재 지출 비율의 차이는 벌어졌다가 외환위기를 졸업한 2000년대 이후, 즉 2001년경 이후부터 다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소비구조가 계층을 막론하고 외환위기 이후 ‘선택재’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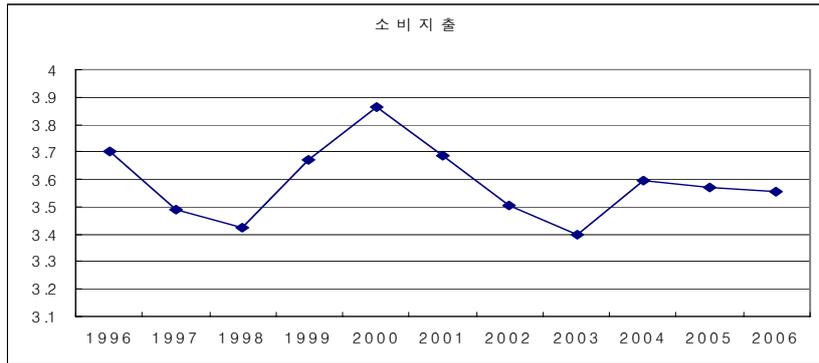
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1분위의 소비성향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오히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적자폭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을 감안하면, 1분위 가구의 가계수지 적자가 비단 소득분배 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비구조 변동의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득계층간 소비구조 격차

이하에서는 소득계층별 소비의 양극화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소비지출비목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의 총 10대 비목으로 분류하는 품목별 분류방식을 택하고 있다. 식료품 항목의 중분류항목에 속하는 외식의 경우 재화의 속성과 사회적 의미가 일반 식료품과 이질적인 점을 고려해 외식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에 추가시켰다.

아래 [그림 4-5]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양극단에 해당하는 10분위와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 비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4-6]과 [그림 4-7]은 11대 비목을 앞서 계산한 선택재와 필수재로 구분해 10분위와 1분위 가구의 분위수 배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4-5] 총 소비지출의 분위수 배율 변화 추이(소득 P90/10)



[그림 4-5]에 의하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도에 약 3.7배에 달했던 분위수 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까지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오히려 증가한다. 10분위와 1분위의 분위수 배율의 증가세는 외환위기를 졸업한 2000년까지 지속되다 200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 이르면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내려가지만 2004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2006년 현재 분위수 배율은 약 3.5배(P90/P10=3.5538)에 이르게 된다.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의 양극화는 경제적 불안정기에 오히려 좁혀지며 경제적 안정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제한된 예산제약으로 소비비목의 변동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반면 부유층의 경우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소비의 증감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표 4-17>을 통해 각 소비비목별로 양극화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비목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선택재 가운데 의류 및 신발, 교육, 보건의료, 교양오락 등은 양극화 진행 양상이 유사한데,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시점까지 양극화가 증가하다가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2004-2005년 시점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최근인 2006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총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이와 매우 유사하며 선택재 가운데 이들 비목이 전체 양극화 추이를 견인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반면, 같은 선택재로 분류되는 비목이라 하더라도 외식,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기타소비지출은 양극화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필수재 비목의 양극화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식료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경향이 감소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 비목의 하위비목으로서 외식의 양극화 경향이 꾸준히 감소했던 것과 달리 식료품의 경우 2002년 이후 분위수 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생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식 이외의 식료품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외식문화의 대중화, 웰빙 트렌드가 보여주듯 식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경향이 계층별 소비지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열수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광열수도비의 분위수 배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먼저, 광열수도 비목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지출액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2006년도 기준 $P90/P10=1.559$)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광열수도와 같은 필수재적 집합재 소비에 있어 양극화가 완화되고 계층(능력)보다 욕구에 따른 소비 가능성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총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열수도가 전체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타 영역에서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통신 지출의 분위수 배율은 19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외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통신에 포함된 항목들, 예컨대 자동차의 구입·유지·보수,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등에 대한 지출이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차지하게 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7〉 비목별 소비지출의 분위수 배율 (p90/p1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소비지출	3.7001	3.4216	3.8652	3.5028	3.5964	3.5538
식료품	2.7623	2.6076	2.5065	2.3526	2.5359	2.5452
외식	4.7593	5.1047	3.4875	3.1813	3.2311	3.3878
주거	1.4322	2.0588	1.915	1.4897	1.4765	1.5848
광열,수도	1.6027	1.6194	1.6054	1.6833	1.6601	1.559
가구집기가사용품	5.4049	6.2462	6.4233	6.9683	4.7895	4.9121
의류및신발	4.8686	4.4244	5.638	4.4886	5.3441	5.0544
보건의료	2.2556	2.2548	2.9758	2.508	2.8489	2.6461
교육	4.243	4.752	6.371	4.6868	6.0695	4.9599
교양오락	5.907	4.5781	6.4753	5.3905	6.7031	6.1958
교통,통신	5.5044	3.6928	4.4419	3.6064	3.4677	3.8609
기타소비지출	5.2943	4.7566	5.5351	5.8191	5.4264	5.2403

한편, 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비패턴이 구체적인 비목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양극화 경향 속에서 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선택한(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양식의 변화 전략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구 소비지출에서 의류 및 신발, 교육, 교양오락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계층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계층별로 종합해 보면, 1분위 가구의 지출에서 외식, 교통통신, 교육, 주거, 보건의료, 광열수도 등의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류 및 신발, 교양오락,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등의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경향을 보인다. 주거, 보건의료, 광열수도, 식료품의

성격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증감이 크지 않은 재화임을 고려할 때 1분위 가구는 외식, 교통통신 및 교육 등의 재화에 대한 지출을 선택적으로 늘리는 반면 의류 및 신발, 교양오락,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소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분위 가구의 경우 외식,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의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반면 주거, 의류 및 신발,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 양 계층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출비중이 증가되는 비목이 양 계층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비목에 있어 상반된 선택을 하고 있다. 즉, 고소득층은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비중을 늘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주거비, 광열수도 항목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두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4. 생애주기별 소비구조의 변화 경향

이하에서는 소비구조의 변화 경향을 통해 ‘세대’를 기준으로 양극화 경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구로, 65세 미만인 가구를 비노인가구로 구분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구조의 양극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세대내(intra generation), 즉 동년배(cohort) 내의 양극화 경향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세대간(inter generational) 양극화 경향이다. 노인가구간의 양극화 경향은 일생을 거쳐 누적된 불평등이 노년기에 이르러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간다는 점에서 비노인가구의 세대내 불평등과 차별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8>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소비지출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8〉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지니계수

		소비지출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1996	노인	0.42114	0.38282	0.74021	0.90828	0.46947	0.86106
	비노인	0.32935	0.27891	0.5024	0.81839	0.40776	0.78731
1998	노인	0.37993	0.35277	0.69999	0.88399	0.46328	0.75545
	비노인	0.31528	0.28706	0.51418	0.79555	0.42154	0.76504
2000	노인	0.37502	0.32953	0.61839	0.88369	0.43485	0.78853
	비노인	0.31709	0.25128	0.39996	0.8128	0.39591	0.7785
2002	노인	0.38663	0.33114	0.63722	0.88332	0.43909	0.84494
	비노인	0.31759	0.25432	0.39137	0.80811	0.37829	0.79205
2004	노인	0.38387	0.35353	0.52737	0.66336	0.43966	0.76852
	비노인	0.30106	0.25408	0.35661	0.61423	0.35959	0.74062
2006	노인	0.413	0.39584	0.6729	0.84483	0.47955	0.83277
	비노인	0.31976	0.26987	0.38723	0.73985	0.37964	0.76054
		의류및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1996	노인	0.775	0.74616	0.9168	0.81922	0.59756	0.59609
	비노인	0.61201	0.75601	0.73064	0.74235	0.58959	0.47232
1998	노인	0.79782	0.75229	0.93854	0.67953	0.50531	0.6156
	비노인	0.64344	0.76226	0.74186	0.70767	0.46979	0.46932
2000	노인	0.75986	0.75129	0.92776	0.76992	0.55508	0.60162
	비노인	0.62857	0.77487	0.73028	0.73068	0.47532	0.48377
2002	노인	0.77793	0.77895	0.95792	0.74637	0.53156	0.58137
	비노인	0.63028	0.78612	0.7361	0.71943	0.4602	0.49643
2004	노인	0.64469	0.6882	0.76851	0.74447	0.53822	0.60085
	비노인	0.55432	0.71544	0.59798	0.70412	0.41214	0.4767
2006	노인	0.83063	0.74877	0.97594	0.74208	0.57514	0.62258
	비노인	0.64477	0.78694	0.78301	0.72597	0.44112	0.5038

이 표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을 비롯해 보건의료 비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비목에서 비노인가구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특성상, 보건의료 지출은 욕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비노인 가구보다 불평등도가 다소 낮게 나왔으나 절대적인 불평등도는 0.7 - 0.8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지니계수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

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비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의 방향성은 세부 비목별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지니계수의 값을 비교해 보면 세대내 양극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가구의 지니계수가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의 경우 지니계수 값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유사한 수준인 반면 식품, 외식, 교육, 의류 및 신발, 기타소비지출 등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지니계수 값의 차이가 큰 비목들이다. 특히, 지니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교육, 의류 및 신발, 외식 등의 비목은 노인가구의 지니계수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강한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 교육의 경우 최근 지니계수가 거의 완전한 불평등, 즉 1에 접근하고 있는데(0.97594) 이것은 어느 정도 가구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연령, 즉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소비행동을 취할 것으로 가정되는 이유는 우선, 연령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대간 소비양극화 경향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액의 배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비목별로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간의 지출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비노인가구의 지출규모가 노인가구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소비지출 배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도에 비노인가구는 노인가구에 비해 1.26배 정도로 약간 높은 정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현재 1.7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 소비의 총적인 측면에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 비목별로 살펴보면 <표 4-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배율이 1에서 1.5 사이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간에 유사한 소비수준을 보이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식료품, 가구집기, 주거, 기타소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배율이 1미만으로 비노인가구보다 노인가구에서 지출수준이 더 높은 비목이며, 여기에는 광열수도, 보건의료 항목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배율이 1.5 이상으로 비노인가구에서 노인가구보다 높은 지출을 보이는 항목이며 여기에는 외식, 교통통신, 의류 및 신발, 교양오락, 교육 등의 비목이 해당된다. 종합해 보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소비지출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 속에 특히 외식, 교통통신, 의류 및 신발 교양오락, 교육 등의 비목에서 세대간 소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양극화는 구조적인 요인보다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표 4-19> 세대간 양극화 경향의 비목별 유형화

유형	해당 소비비목
비노인가구 ≈ 노인가구 (배율 : ~ 1.5)	식료품,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기타소비지출
비노인가구 < 노인가구 (배율 : ~1)	광열수도, 보건의료
비노인가구 > 노인가구 (배율 : 1.5 ~)	외식, 교통통신, 의류및신발, 교양오락, 교육

5. 소비구조 변화 경향의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경향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양극화 경향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연령집단 역시 중요한 주체로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일부 선택재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지출의 증가 경향은 저소득계층 및 연령집단을 막론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일부 재화의 속성변화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 경향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빈곤선 계층 등 향후 복지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현대 소비사회에서 일부 선택재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가구의 지출 증가는 다양한 신용제도의 증가와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가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빈곤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신중’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교육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불평등의 관계는 비교적 견고하게 입증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강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이나 기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들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 변수들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mediating factor) 가운데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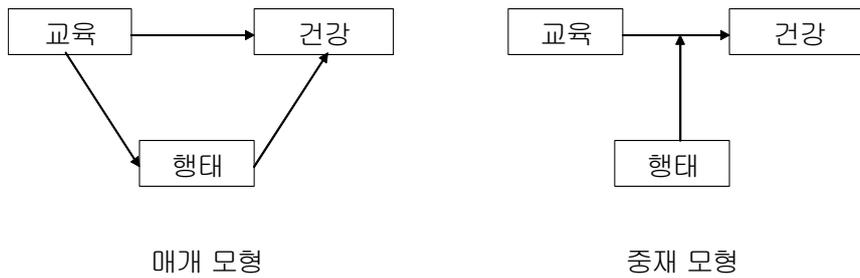
수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위치 중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가 어떤 매개요인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수준별 주관적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직업 및 소득 등의 물질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그리고 질병 요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분해하는 것이다.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1)각 연도별로 교육수준이 주관적 불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2)각 연도별로 교육수준과 주관적 불건강의 매개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고, (3)각 연도별로 각각의 매개요인이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교육수준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매개 모형(mediation model)과 중재 모형(moderator model)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Thrane, 2006). [그림 4-6]은 행태를 예를 들어 이 두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매개 모형에서는 교육이 행태를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중재 모형에서는 행태가 교육과 건강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교육수준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개 모형과 중재 모형 모두를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매개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림 4-6] 교육수준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매개 모형과 중재 모형



어떤 요인이 매개 요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 요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독립변수인 교육수준과 잠재적인 매개변수들과 chi-square test를 통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둘째, 교육수준과 주관적 불건강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성, 연령, 독거여부를 보정한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셋째, 교육수준과 매개 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주관적 불건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매개 요인의 매개 효과의 크기는 추가 위험의 상대적 감소(relative decline of excess risk: RDER) 추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frac{[(OR_{base\ model} - OR_{base\ model + intermediary\ factor(s)}) / (OR_{base\ model} - 1)] \times 100}{\dots\dots\dots} \text{식(4-2)}$$

식(4-2)에서 기본모형(base model)은 교육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교육수준 변수와 함께 나이, 독거여부를 포함한 것

이다. 성별은 기본모형의 독립변수로 넣지 않고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Intermediary factor들은 물질 요인, 행태 요인, 질병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과 건강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표 4-20〉 분석 모형 및 변수

모형	포함된 변수
Model 1 Base	교육수준, 나이, 독거여부
Model 2 물질요인	Base 변수+소득, 직업
Model 3 행태요인	Base 변수+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스트레스
Model 4 질병요인	Base 변수+암,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천식, 디스크, 관절염, 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Model 5 물질요인+행태요인	Base 변수+물질 변수+행태 변수
Model 6 물질요인+질병요인	Base 변수+물질 변수+질병 변수
Model 7 행태요인+질병요인	Base 변수+행태 변수+질병 변수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였다.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된 보건 의식행태조사에 포함된 주관적 건강에 관한 질문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한 응답 항목은 “매우 건강한 편/건강한 편/보통인 편/건강하지 못한 편/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었다. 반면에 2005년에는 개별 면접조사에서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불건강은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로서 1998년과 2001년에는 “건강하지 못한 편” 혹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정의하였고, 2005년에는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정의하였다. <4-18>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4-21〉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비율 (%)

		1998년			2001년			2005년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
남자	20-44세	19.2	11.0	6.8	18.9	9.5	6.5	16.0	8.0	5.8
	45-64세	31.6	16.3	13.3	20.9	17.9	9.4	35.1	17.9	10.7
여자	20-44세	24.0	17.2	12.1	17.9	10.6	9.2	23.3	10.0	7.1
	45-64세	45.1	26.3	15.6	40.0	20.6	13.4	40.0	21.0	16.3

3.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와 교육수준이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질요인, 질병요인, 행태요인의 기여도의 연도별 추이를 성별, 연령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4-22>와 <표 4-23>과 같다.

남자 20세-44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행태요인과 질병요인이, 2001년에는 물질요인과 질병요인이 그 차이를 설명하였으나 2005년에는 아무 요인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1998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개요인의 기여도는 크지 않았는데, 고졸 미만과 고졸에서 각각 행태요인은 7.6%, 12.0% 기여하였고, 질병요인의 경우는 6.8%, 4.3% 기여하는데 그쳤으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각각 84%, 76.1%나 되었다. 2001년에는 물질요인의 기여도가 39.2%로 비교적 높았다.

남자 45세-64세에서는 1998년에 비해 2005년에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5년에 물질요인과 질병요인이 고졸 미만과 대학이상에서의 주관적 불건강 격차의 매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5년에 물질요인은 각각 43.1%, 41.1%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를 설명하여 10% 미만 설명력을 가진 질병요인에 비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질병요인이 24.1% 고졸

미만과 대학 이상 사이의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고졸과 대학이상 사이에서도 2001년과 2005년에는 질병요인이 각각 17.3%, 14.5% 설명하였다.

〈표 4-22〉 연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 및 그 차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남자 (1998, 2001, 2005)

	20세-44세		45세-64세	
	고졸 미만	고졸	고졸 미만	고졸
	Odds Ratio(95% CI)			
	3.50***(2.46-4.95)	1.92***(1.46-2.53)	2.88***(1.89-4.39)	1.22(0.77-1.92)
1998년	행태, 질병		행태, 질병	
	행태 7.6%	행태 12.0%	물질 43.1%	
	질병 6.8%	질병 4.3%	질병 3.7%	
	행태+질병 1.6%	행태+질병 7.6%	물질+질병 2.7%	
	미상 84%	미상 76.1%	미상 50.0%	
	2.89***(1.79-4.67)	1.50*(1.07-2.12)	2.12***(1.26-3.57)	1.98*(1.13-3.48)
2001년	물질, 질병		질병	
	물질 39.2%	질병 4.0%	질병 24.1%	질병 17.3%
	질병 6.3%	미상 96.0%	미상 75.9%	미상 82.7%
	물질+질병 4.8%	-	-	-
	미상 49.7%	-	-	-
	2.19*(1.17-4.09)	1.30(0.88-1.92)	3.87***(2.52-5.95)	1.76*(1.11-2.81)
2005년			물질, 질병	
			물질 41.1%	질병 14.5%
			질병 9.1%	미상 85.5%
			물질+질병 6.6%	-
			미상 43.2%	-

주: 어두운 부분은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가 없어서 기여도 분석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 는 아무 요인의 기여도도 없음을 나타냄.

여자 22세-44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는 남자에서와는 반대로 2005년에 와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물질요인의 교육수준의 주관적 불건강 격차에 대한 기여도가 20.8%~34.2%로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는 행태요인이 7.9%~15.8%, 질병요인이 7.9%~15.3% 각각 기여하고 있었다. 2001년에는 행태요인만이 1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물질요인의 기여가 나타나지 않았고 행태요인과 질병요인의 기여도 10% 내외로 미미하였다.

여자 45세-64세의 경우 고졸과 대학이상의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는 없었고, 고졸 미만과 대학이상에서는 2001년에 커졌다가 2005년에는 다시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8년에는 고졸 미만과 대학 이상 사이의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를 물질요인이 16.6% 설명하였다. 2001년에는 물질요인이 약 11%, 행태요인과 질병요인이 약 14% 정도 고졸 미만과 대학 이상의 주관적 불건강 차이를 설명하였고, 2005년에는 물질요인의 기여는 나타나지 않았고 행태요인과 질병요인의 독립적 기여도 미미하였으나, 행태요인이 질병요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기여가 47.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23〉 연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 및 그 차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여자 (1998, 2001, 2005)

	20세-44세		45세-64세	
	고졸 미만	고졸	고졸 미만	고졸
	Odds Ratio(95% CI)			
	1.72***(1.29-2.31)	1.38**(1.09-1.74)	3.20**(1.54-6.66)	1.77(0.81-3.83)
1998년	물질, 행태		물질, 행태	
	물질	20.1%	물질	34.2%
	행태	11.1%	행태	15.8%
	물질+행태	4.2%	물질+행태	-7.9%
	미상	64.6%	미상	57.9%
	물질, 질병		물질, 질병	
	물질	20.8%	물질	21.1%
	질병	15.3%	질병	7.9%
	물질+질병	4.2%	물질+질병	5.3%
	미상	59.7%	미상	65.7%
	행태, 질병		행태, 질병	
	행태	13.9%	행태	7.9%
	질병	8.3%	질병	13.2%
	행태+질병	11.1%	행태+질병	0.0%
미상	66.7%	미상	77.9%	
	1.77*(1.12-2.78)	1.11(0.80-1.55)	3.65***(1.89-7.05)	1.61(0.79-3.29)
2001년	행태		물질, 행태	
	행태	10.4%	물질	11.7%
	미상	89.6%	행태	14.3%
	-	-	물질+행태	6.4%
	-	-	미상	67.6%
	-	-	물질, 질병	
	-	-	물질	11.3%
	-	-	질병	14.7%
	-	-	물질+질병	6.4%
	-	-	미상	67.6%
	-	-	행태, 질병	
	-	-	행태	14.0%
	-	-	질병	14.7%
	-	-	행태+질병	6.8%
-	-	미상	64.5%	
	3.03***(1.76-5.21)	1.60*(1.09-2.34)	2.52*(1.22-5.21)	1.52(0.71-3.27)
2005년	행태, 질병		행태, 질병	
	행태	7.9%	행태	3.3%
	질병	14.4%	질병	-8.3%
	행태+질병	6.9%	행태+질병	15.0%
	미상	70.8%	미상	90.0%
			행태, 질병	
			행태	6.3%
			질병	6.3%
			행태+질병	47.7%
			미상	39.7%

주: 어두운 부분은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가 없어서 기여도 분석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 는 아무 요인의 기여도도 없음을 나타냄.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연구 결과 성별 연령 계층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 20세-44세 계층의 경우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으나 나머지 성별 연령별 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거나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소득수준별로 건강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교육수준 내부에서도 고졸과 대학 이상 사이에서의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는 특히 45세 이후의 장년층에서는 대부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교육수준별 건강형평성 분석에서 교육수준 변수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은 각각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개요인을 발견하고, 그 기여정도를 추산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연도별, 성별, 연령별로 일관적인 경향을 찾기는 어려웠다. 또한 매개요인의 기여도도 눈에 띄는 정도로 크지는 않았으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대부분 50% 이상을 넘었다.

남자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물질요인과 질병요인이 매개요인이었고 행태요인은 거의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요인은 1998년(45세-64세), 2001년(20세-44세), 2005년(45세-64세)에 지속적으로 고졸 미만과 대학 이상 사이의 주관적 불건강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의 차이가 소득과 같은 물질요인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행태요인이 매개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교육수준별로 건강행태 실천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교육수준별 주관적 불건강의 해소를 위해서 건강행태를 접근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

자에서 교육수준의 차이는 질병 유병의 차이를 통해 주관적 불건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질병예방 및 관리 사업들을 통해 교육수준간 불건강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여자에 있어서는 물질요인의 매개요인으로서의 기여도가 남자에서 만큼 크지는 않았다. 또한 물질요인의 기여도가 1998년에는 20% 내외에서 2001년에 약 11%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남자와 또 다른 점은 기여도가 10% 내외로 미미하긴 하지만 행태요인이 지속적으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매개요인으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물질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 직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자에서는 질병요인, 여자에서는 질병요인과 더불어 행태요인을 통해 교육수준이 주관적 건강수준을 일정 부분 결정하므로 교육수준간 건강행태의 차이와 질병발생 및 관리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다소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제1절 머리말

지난 몇 년간 경제·사회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와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에는 절대빈곤 계층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여 양극화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정책적 성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최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TA 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의 증가 추세는 취약 계층에게 불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현재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도 과열된 경쟁 양상은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과 교육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빈부 격차와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중간 과정으로서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와 가치의 차별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교육의 결과는

사람들의 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배분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결과가 반드시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 기회 획득과 교육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leman et al., 1966). 더 나아가서 제도 교육은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에서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Bowlse & Gintis, 1976; Bourdieu & Passeron, 1977). 이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기 보다는 빈곤과 소외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기제로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은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공정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가난과 소외를 대물림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 부문의 격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등의 매개 작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논란과 쟁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역할이 별로 크지 않는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부문에서의 격차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회가 처한 조건에 의존한다. 특히,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수준은 교육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 경제적 체제와 조건에 따라서 부모 세대의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교육의 역할과 힘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성된 교육 부문에서의 불평등은 다시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어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교육 격차에 대한 관심은 현 교육 체제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회 배분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사회 이동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기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이다.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고 사교육의 규모는 증가하는 등 배경적 요인에 따라 교육 수준의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기회 획득과 학업 성취에서 학생 배경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추세 속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 이동 통로로서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격차의 심화와 그로 인한 사회 불평등 재생산의 강화를 뒷받침해 줄만한 자료와 연구는 그렇게 충분하게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김경근, 2005; 강영혜 외, 2005; 류방란·김성식, 2006), 그러한 교육 격차가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변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부문을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 사회 부문의 변화와 교육 부문의 변화를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교육 부문이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간 수행되었던 교육 양극화 및 격차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교육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 배경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에 초점을 두고 그와 같은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의 차이가 학교 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누적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분석보다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나 진학과 같이 두 시점 이상의 변화 정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어떻게 누적 확대되어 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배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기회 획득에서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분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각급 학교에 대한 진학 기회는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외형적으로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 기관의 분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 격차는 여전히 존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기관의 질적 분화를 반영함으로써 세분화된 교육 기회의 획득과정에서 계층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부문에서 격차를 만들어 내는 정도가 어느 수준으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교육 격차,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컨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학생집단에서 교육 격차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부문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국가 간의 비교

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교육 양극화 및 격차에 관한 연구를 경제 사회 부문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심화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교육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교육 기회 불균등이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하고, 교육 부문의 불평등 해소 및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 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中等교육 이후의 단계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 대상을 중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대학 입학 및 직업과 소득 획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격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입학 및 직업, 소득 부분에서는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절부터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제2절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

이 절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 기회와 결과의 격차, 그리고 계층 이동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의 확대 속에서 교육 연수와 진학, 계열화에 미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추적하고, 교육의 노동시장 효과와 관련하여 직업지위 획득과 학력 및 학벌의 임금효과를 검토하고, 세대 간 사회 이동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기회의 격차 - 양적 격차의 축소와 질적 격차의 구조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0여 년 동안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 기회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확대 과정으로 인하여 교육연수에 대한 계층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의 영향력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진학 여부에 따른 계층 간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분석들은 교육 기회나 진학 기회 획득이 여전히 공평하지 않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한 과정의 핵심에는 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 이후 질적 격차는 일반계와 전문계라는 고등학교 계열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후 대학 진학 여부와 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할 때 출신배경의 영향력은 일정 혹은 특별한 경향을 갖지 않으나,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일반계를 선택할 확률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장상수, 2007). 전반적으로 교육연수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계열과 대학 유형 및 서열의 차이에 기반하는 질적 격차는 지속 또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기회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배경 변인 간의 차이도 나타난다. 상급 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지위에 비해 그 감소폭이 작으며, 성적 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부모 세대의 출신 배경을 매개하는 성적이나 사교육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교육 기회의 확대로 전체적인 격차

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계열화와 대학 서열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계층화는 여전히 지속 혹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체제의 분화와 계층화는 출신 배경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성적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크게 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게 한다. 요컨대,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외형적인 계층 간 교육 격차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매개하는 교육 계층화와 사교육과 같은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지위 및 임금에 대한 교육의 효과,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는 자녀의 학력 수준과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획득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어 왔다. 반면에 부모의 교육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학력사회화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 학력을 매개로 한 계층 재생산 경향이 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력 수준에 따른 직업 지위나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학력을 매개로 한 재생산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연한 또는 학력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대학교육 기회가 확장되는 시기 이후부터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연수로 측정되는 학력의 임금효과는 축소되어 왔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의 임금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대학 졸업의 임금 효과도 비록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전 시기 보다는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지위와 소득에 대한 교육의 효과 감소는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

면서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증대되고, 학력에 따른 직업획득이나 임금 수준의 격차가 감소하여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지위 획득이나 소득 결정, 그리고 계층 이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대학의 위계 서열화라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실제 대학 졸업의 임금 효과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에 임금 프리미엄이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한준·한신갑, 2006; 오호영, 2006; 장수명, 2006). 즉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대학교육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대학 졸업의 평균적인 효과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위계서열에 따른 격차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급격한 자본주의적 계층 구조로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교육 기회 또한 급속하게 팽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학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력사회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진전되면서 대학 위계서열을 중심으로 교육 격차의 발생 지점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은 단순한 교육연수가 아니라 자녀의 학력/학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출신배경의 영향에 대해서 일치된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성적이나 사교육 경험 등의 격차, 그리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계열화, 대학 진학 경로의 차이에 대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지속 혹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가정 배경과 학업 성취의 격차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중등교육 후반기나 고등교육에서 교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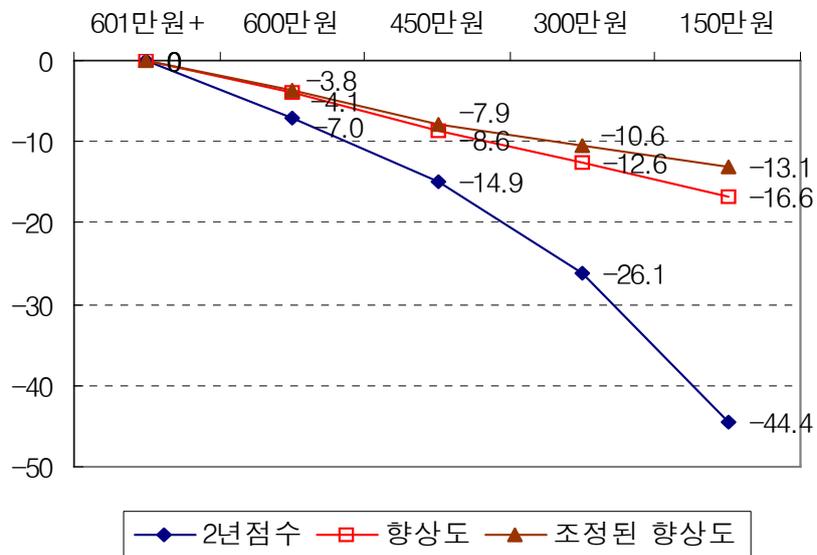
관의 분화와 계층화가 심화되면 입학 전형에서 중요하게 이용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 중요해 진다. 상위 계층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전 학교 단계부터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높은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 절에서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 성적을 중심으로 하여 계층 간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누적되어 가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2005』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나타나는 격차를 분석하였다. 학업 성취도 성장 추이가 가정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 시점에서의 격차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성취도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어떻게 누적(또는 완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시점에서의 성취 수준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성적의 향상도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상당하였다. [그림5-1]과 [그림5-2]는 영어 과목의 2학년 성취수준과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 향상도에 있어서 아버지 교육 수준과 소득에 따른 격차를 보여준다. 가구 소득이 601만 원 이상인 집단의 학생은 150만 원 이하인 학생보다 2학년 영어 성적에서 -44.4점 정도 낮았다. 특히, 150만 원 이하 집단에서 성취 수준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학력 부진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 향상에 있어서도 -16.6점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교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적 부진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수학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 참조). 이를 통해서 보면, 부모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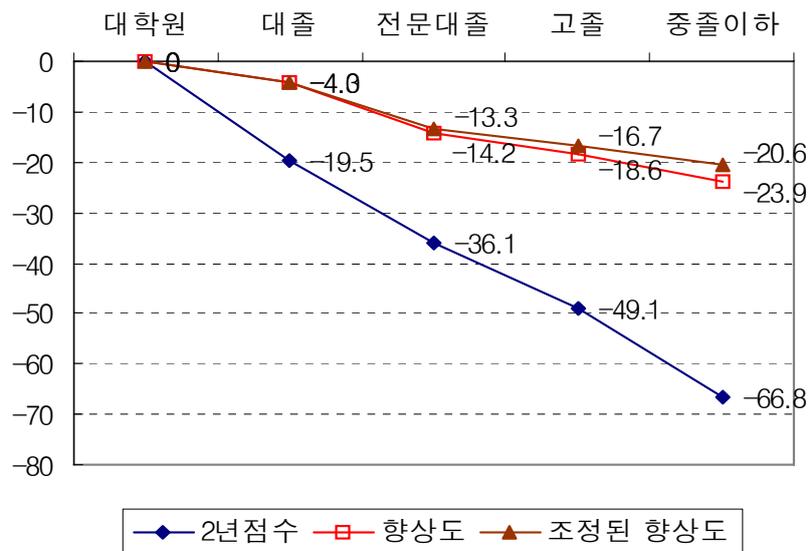
과 가구 소득 수준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소득 수준에 따른 영어 성적의 격차



* 조정된 향상도는 학생 노력, 공부 시간, 과외시간을 통제한 후 산출된 것임

[그림 5-2] 아버지 교육 수준에 따른 영어 성적의 격차



* 조정된 향상도는 학생 노력, 공부 시간, 과외시간을 통제한 후 산출된 것임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 수준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는 부모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소득 수준 변인의 회귀 계수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적 의미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가 학력 사회화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적인 차이에서는 1학년 성취수준에서 서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성적 향상 정도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면, 광역시 지역의 성취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나타난 것일 뿐이며, 지역 요인 자체가 학업 성취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배경적 요인 이외에 학생 노력, 공부 시간, 학교 특성 변인들은 가정 배경 요인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앞의 그림의 조정된 향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학생 변인을 투입하더라도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학생 노력이나 공부 시간을 경유하여 매개되는 학생 배경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배경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개인 노력은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가정 배경,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에 따른 성취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누적되는 격차의 크기가 실제 성취 수준의 격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정의 소득수준이 601만 원 이상인 집단의 학생과 150만 원 이하의 학생 간에 나타나는 2학년에서의 성취 수준 격차가 44점 정도였지만, 1학년부터 2학년에 이르는 1년 동안 새롭게 발생한 격차가 16점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추후 필요할 것이지만, 중학교 단계 이후 교육 격차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제4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6년 현재 99.7%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률과 취학률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는 보편화 단계에서는 하위 계층의 자녀들도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 제한에 따른 단순한 차별화가 작용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보아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적 요인이 진학 과정에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보편화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 팽창으로 상급 학교 진학이 갖는 희소가치가 줄어들면, 교육 기관의 내적 분화를 통하여 교육기회가 가정배경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Bowles & Gintis, 1976). 우리나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지는 분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반계와 전문계(실업계)로 나누어져 있는 고등학교 체제는 일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 경로는 이후 대학 진학이나 직업지위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계로 진학한 학생들은 이후 고등교육 기회의 획득이나 직업지위 획득 과정에서 불리하다. 최근 전문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에 비해서 이후 대학 진학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59.8%의 학교와 73.6%의 학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으로 고등학교 진학 단계는 일반계와 전문계의 구분 외에는 사실상 별다

른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다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면서 예전의 명문고와 같은 “선별된 학교”가 부각되고 있다. 학교별 선발을 시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등이 그것이다. 비록 특목고나 자사고의 비중은 학생수로 볼 때 1.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진학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미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 단계에서의 경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진학 과정은 가정 배경이 낮은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좀 더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의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실업계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김경근·변수용, 2006; 류방란·김성식, 2006).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 진학에 효과적인 학교로 인식되고 있으나 입학 기회의 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상위 계층의 질적 차별화 전략이 한국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김경근·변수용, 2006). 고등학교의 분화된 체제가 불평등의 재생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학교로 진학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 고등학교 진학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차 수준을 분석하였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교육 격차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대한 가정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 사립학교 포함)로 학교 유형을 나누어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경로를 분석하였다. 어떤 가정 배

경의 학생들이 소위 좋은 학교로 인식되는 특목고로 진학하고, 어떤 학생들이 전문계(실업계) 학교로 진학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과정을 일반고, 전문고, 특목고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가정 배경에 따른 진학률 또는 진학 가능성은 상당 수준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1>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하여 특목고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성적을 통제한 후에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SESES)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도 이전 모형에 비해서 회귀계수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SES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특목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exp(0.406)=1.5$ 배 높았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은 $\exp(-0.301)=0.7$ 배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성취 수준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SES 수준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특목고 진학 가능성은 더 높으며 전문고 진학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목고 진학은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가정 배경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별된 학교가 보편화된 중등교육 체제 하에서 계층간 불평등을 매개하여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적 지원 수준은 특목고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수준은 아니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다른 특성 변인을 통제하기 이전의 기초 모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다른 변인들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교육 지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좋거나 성취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SES와 같은 배경 변인과 부모의 교육 지원 변인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생의 노력이나 공부 시간들도 다른 변인들과 독립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태도나 공부시간은 특목고 진학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업 태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학교 교육의 경험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 노력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가정 배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특목고와 일반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5-1〉 고등학교 진학 경로에 대한 학교 및 학생 변인의 영향력 분석

	특목고/일반고		전문고/일반고	
절편	-7.012	2.182**	-2.342	1.552
학교수준				
중소도시	0.017	0.292	-0.092	0.227
읍면지역	-0.671	0.358†	-0.150	0.237
평균SES	-0.506	0.456	0.637	0.324†
수업태도	-0.236	0.829	-0.296	0.594
학생수준				
여학생	0.316	0.205	0.304	0.077***
SES	0.406	0.141**	-0.301	0.046***
교육지원	0.008	0.147	-0.308	0.046***
공부시간	0.296	0.103**	-0.033	0.034
수업태도	0.290	0.158***	-0.249	0.056***
성취수준	2.682	0.247†	-1.878	0.050***

† : $p < .10$, * $p < .05$, ** $p < .01$, *** $< .001$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화된 학교가 하위 계층 학생의 사회 이동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노력과 학교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용된 공부시간과 수업태도가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만큼 크다. 즉, 가정 배경에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특목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업고로 진학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학생 개인이나 학교 정책에 의해서 가정 배경에 따른 계층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는 실제 공부시간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SES와 공부 시간의 영향력 크기를 1-표준편차 단위로 조정하면,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0.32(=0.406*0.79)$ 가 되고 공부 시간의 영향력은 $0.29(=0.296*0.98)$ 이 된다. 두 변인의 영향력이 서로 비슷하므로, SES 수준에서 1-표준편차 아래에 있는 하위 계층 학생이 1-표준편차 위에 있는 학생과 비슷한 정도로 특목고 진학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2-표준편차 이상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SES 수준이 1-표준편차 이상에 위치한 학생들이 1주일에 평균 4.9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⁵⁾, 하위 계층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도 1주일에 34.8시간 이상을 공부에 투자해야 비슷한 진학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만약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표준편차 아래에 위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시간 외에도 92.8시간을 공부에

5) SES 수준이 1-표준편차 상위인 학생의 평균 공부시간(4.9시간)은 자연로그값으로 변환된 공부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SES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을 구한 후 이를 활용하여 산출되었다(공부시간_i = β_0 + β_1 (SES_i) + e_i). 회귀계수 값은 β_0 이 1.38, β_1 이 0.82로 나타났고, 여기에 SES의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0.257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즉, $4.9 = \text{Exp}(1.59 = \beta_0 + \beta_1 * 0.257)$).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더욱 비관적인 사실은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 시간이 특목고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교육 보편화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계열화, 또는 세분화된 교육체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배경적 요인이 진학 과정에 작용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가에 대해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취 수준과 개인의 노력, 학교 경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목고나 일반계 진학은 상위 계층 학생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학교 경험 변인인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성취 수준을 매개하여 작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 긍정적인 학교 경험은 학업 성취의 향상을 통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목고 진학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 진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 진학은 학교 수업만으로도 진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특목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목고 진학은 학교 수업 시간의 집중 이외에도 가정에서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요컨대, 최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선별된 학교 체제의 확대는 진학 과정에서 학생 배경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도 교육 계층화에 대비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5절 부모 교육수준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평등의 요소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하지만 이를 완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격차 또는 불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양극화 논의와 관련해서 불평등 수준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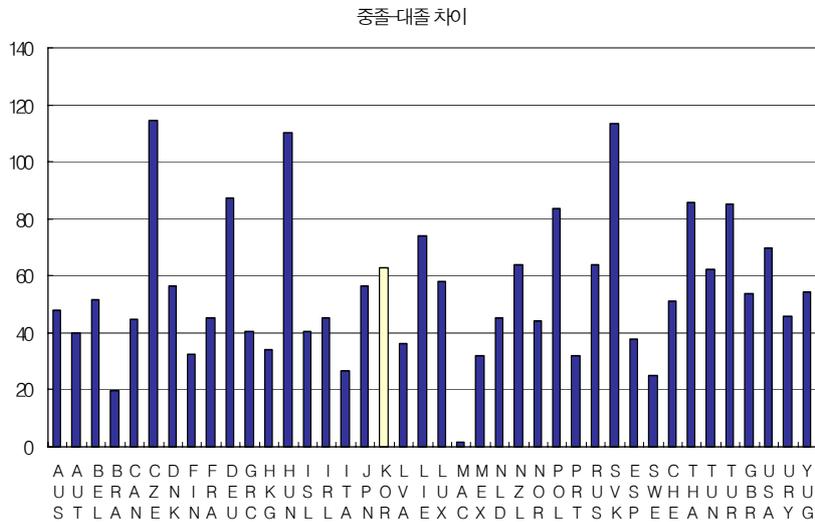
현재 교육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과거의 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컨대, 5년 전의 수준보다 현재의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거나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 부문에서 지니 계수나 양극화 계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양극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 이와 같은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매년 성취도 평가를 하더라도 매년 표본 학생들이 달라지며, 동일한 학생이라도 학년이 다르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성취도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한 가지 대안은 교육 격차 또는 불평등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교육 제도와 사회적 여건이 달라서 정확한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격차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추어 큰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대체적인 경향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2003) 자료를 활용하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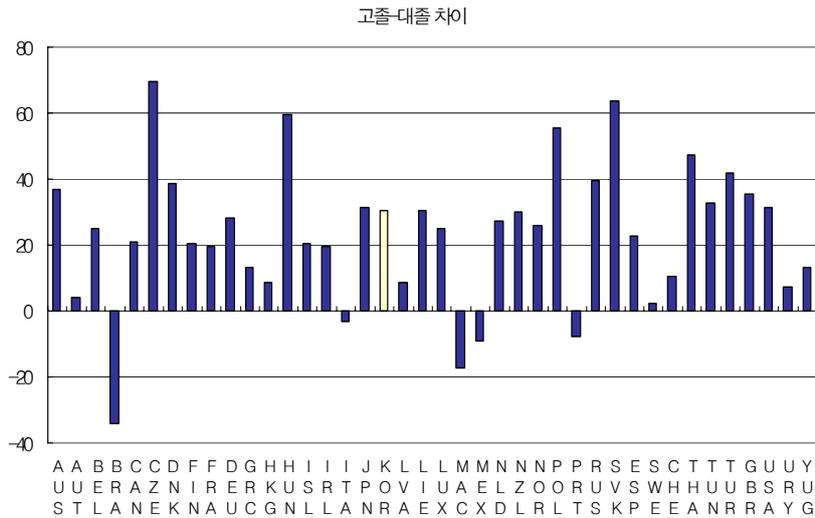
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학 성취도 점수의 차이를 40개 국가 간에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성취도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과 [그림 5-4]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학생과 대졸 이상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40개국 가운데 11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과 대졸 이상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15번째로 큰 수준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의 수준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3]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도 차이: 중졸이하-대졸이상



[그림 5-4]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도 차이: 고졸-대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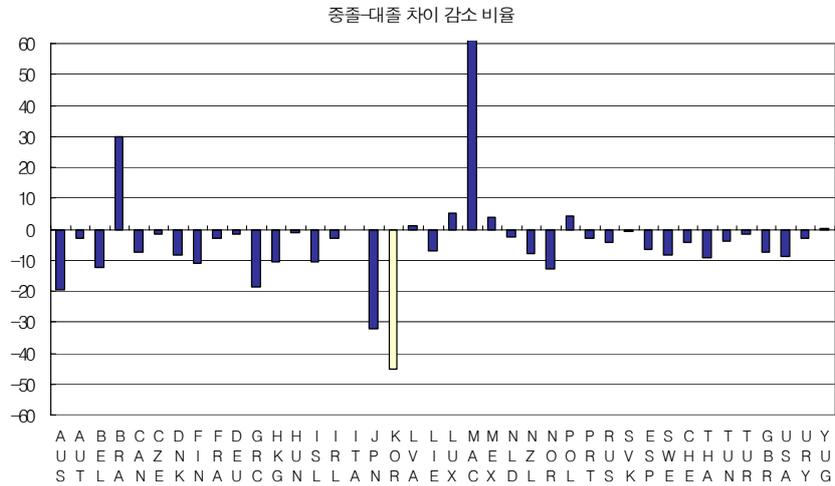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학생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 노력, 공부 시간, 과외 시간의 영향력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과외 시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수업 경험의 차이도 학생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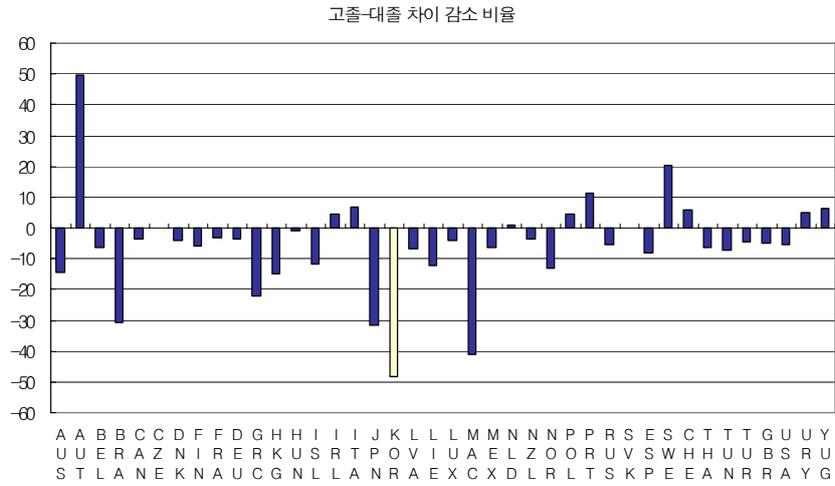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나면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차는 크게 감소한다. [그림 5-5]와 [그림 5-6]은 성별, 학생 노력, 공부 시간, 과외 시간, 수업 경험 등의 학생 및 학교 변인을 통제할 경우 아버지 교육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의 감소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

소 비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학생과 대학 졸업 이상인 학생 간의 차이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인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과 대학 졸업 이상인 학생 간의 차이 모두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학생 및 학교 변인 투입이후 성취도 차이의 감소 비율:
중졸-대졸



[그림 5-6] 학생 및 학교 변인 투입이후 성취도 차이의 감소 비율:
고졸-대졸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격차 수준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의 많은 부분은 학생 개인에 의해서 경험되는 노력, 공부시간, 과외, 그리고 수업경험 등을 통해서 매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 배경에서의 차이를 극복해 주는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서의 격차를 줄여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을 매개하지 않고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부문에서의 불평등, 격차, 그리고 양극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대응 방안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균등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6절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유전적 과정에 의해 부모의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s)과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skills)이 자녀에게 전달된다.⁶⁾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역시, 자녀가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능력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 역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적 지위(occupational status)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력 및 직업적 지위의 세대 간 관련성(intergenerational correla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유의한(significant)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밝히고는 있으나, 그 정도가 어떠한 수준인지 판별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련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상황이 보다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양호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를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상황이 보다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양

6) 인지적 능력이란 주로 지능을 의미한다. 비인지적 능력에는 성취동기, 추진력, 근면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 힘, 순재주와 같은 육체적인 측면, 외향성, 긴장에 대한 반응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구(1992) 참조.

호한 상황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12개국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부모 학력과 자녀 학력 및 직업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Iannelli(200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0년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부가조사(European Union Labor Force Survey, Ad Hoc Module 2000) 자료를 이용하여, 12개 유럽 국가에 대해 동일한 기준 하에서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방식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부모 학력과 자녀 학력 및 직업지위 수준의 관련성이 12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어떠한 수준인가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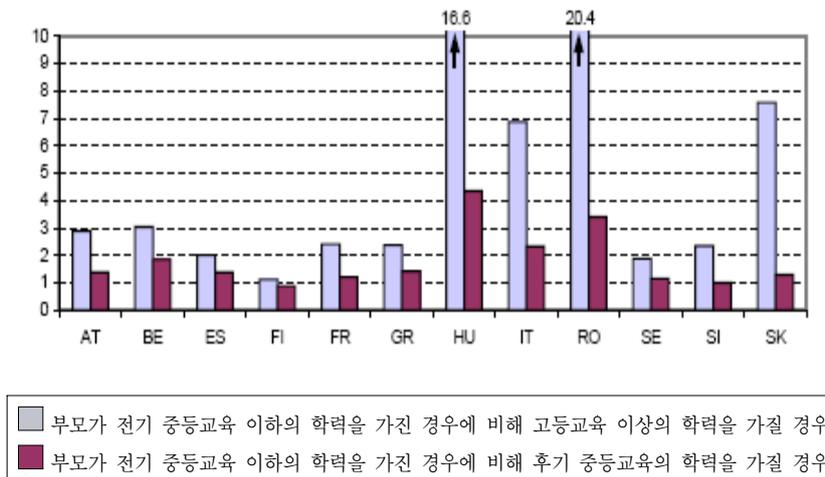
1.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간의 관련성

Iannelli(2002)에서는 각국에 대해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될 우도비(Odds Ratio)를 구하여, 다음 [그림 5-7]과 같은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옅은 회색 막대는() 부모가 전기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을 (자녀가 고등교육 미만의 학력을 가질) 확률에 비해 몇 배나 높아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이 비율은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가장 커서 각각 20.4배, 16.6배의 높은 숫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로 7배 내외의 숫치를 나타내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2-3배, 핀란드는 1배의 숫치를 보이고 있다. 같은 그림에서 부모가 전기 중등교육 이하의

7) 로짓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여성 더미변수와 부모의 학력에 대한 변수들로, 다음 <표 5-2>에 제시된 한국 자료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모델과 동일하다.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후기 중등교육의 학력을 가질 경우의 우도비(Odds Ratio)를 보여주는 짙은 회색 막대를(■) 보면, 역시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3-4배의 높은 숫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2배 정도의 숫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1배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7]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우도비(Odds Ratio)



주: AT-오스트리아, BE-벨기에, ES-스페인, FI-핀란드, FR-프랑스,
GR-그리스, HU-헝가리, IT-이탈리아, RO-루마니아, SE-스웨덴,
SI-슬로바니아, SK-슬로바키아

우리나라의 자료에 대해 Iannelli(2002)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될 우도비(Odds Ratio)를 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2>이다. 표를 보면 한국의 경우 부모가 전기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후기 중등교육의 학력을 가질 경우, 자녀가 고등

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에 비해 2.1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전기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경우에는 이 비율이 7.0배 증가하고 있다. 앞의 유럽 국가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비율은 루마니아와 헝가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탈리아나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숫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5-2〉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한국)

	전기 중등교육 이하 = 1		고등교육 이상 = 1	
	분석 결과	Odds Ratio	분석 결과	Odds Ratio
여성더미	-1.014 (0.2249)	0.3626 (0.0815)	-0.3424 (0.0849)	0.7101 (0.0603)
부모의 학력				
후기 중등교육	-0.6375 (0.2663)	0.5286 (0.1407)	0.7267 (0.0960)	2.0682 (0.1986)
고등교육	-2.1725 (0.7191)	0.1139 (0.0819)	1.9496 (0.1477)	7.0258 (1.0375)
상수항	-2.4790 (0.1334)		-0.3849 (0.0678)	
Loglikelihood	-396.14		-1593.42	
Pseudo R ²	0.0550		0.071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한국의 경우 본 논문에서의 비교 대상인 이 두세대 기간 동안 부모의 학력수준은 거의 최하위였지만 자녀의 학력수준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날 정도로 급속한 학력 신장이 있었지만, 그러한 발전이 모든 계층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높아지는 경향은, 동구권의 나라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2.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직업지위 간의 관련성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학력별로 그리고 부모의 학력별로 최초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3>이다. 이를 보면 자녀의 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최초 직업의 사회경제지수 평균값은 33.3, 40.5, 47.6으로 증가하고 있다.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이상 간의 지수의 격차는 7.1 수준이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지수의 격차는 보다 감소한다. 부모의 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인 경우, 지수의 평균값은 42.6, 44.9, 48.0으로 증가한다. 부모의 학력이 후기 중등교육인 경우와 고등교육 이상인 경우 자녀의 최초 직업의 사회경제지수 상의 격차는 3.1 정도이다.

<표 5-3> 자녀의 학력별, 부모의 학력별 최초 직업의 사회경제지수 평균값 (한국)

자녀 학력별			부모 학력별		
전기 중등교육 이하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	전기 중등교육 이하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
33.3	40.5	47.6	42.6	44.9	48.0
(7.0)	(8.5)	(11.4)	(10.3)	(10.5)	(12.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8) 여기서의 분석은 단순히 자녀가 고등교육을 마쳤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이다. 만약 자녀가 어떠한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했는지를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인지 여부나 대학원까지 마쳤는지 여부) 분석하면, 계층별 불균등성은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녀 본인의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지수의 격차나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지수의 격차가 모두,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녀의 학력이 후기 중등교육인 경우와 고등교육 이상인 경우 사회경제지수의 격차는 7.1 수준인데, Iannelli(2002)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그 차이가 15 이상의 숫자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후기 중등교육인 경우와 고등교육 이상인 경우 자녀의 직업의 사회경제지수 상의 격차는 한국이 3.1 정도인데 비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최소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녀 본인의 학력별로 혹은 부모의 학력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⁹⁾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에 보다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음 <표 5-4>은 각국의 자료를 통해 부모의 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교육 이상인 경우, 자녀 직업의 사회경제지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Model 1과 Model 2의 방식¹⁰⁾을 통해 추정하고 그 계수 값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는 Model 1에서 Model 2로 변환에 따라 계수 값이 어느 정도나 하락하는지, 즉 자녀의 학력 수준을 통제하면 부모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감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Model 1의 계수 값이 하락함에 따라 마지막 열의 계수 값의 하락 폭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정도가 큰 국가일수록, 그

9) Iannelli(2002)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은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등)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스템 상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은 세대간 불평등의 재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0) Model 1은 여성 더미변수 외에 부모의 학력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고, Model 2는 여기에 자녀 본인의 학력까지 독립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효과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에서 본다면 한국은 극히 예외적인 국가이다. Model 1의 계수 값은 핀란드보다도 적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Model 1에서 Model 2로 변함에 따른 계수 값의 하락 정도는 루마니아나 헝가리와 비슷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결국 한국은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효과는 적다고 하더라도,¹¹⁾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표 5-4>의 상위에 있는 국가들(즉 부모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슷하게,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앞의 분석 결과와도 서로 조응하는 결과이다.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11) 실제 그런지 아니면 각국간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단순한 통계적 문제인지는 분명치 않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한국의 노동시장이 학력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5-4〉 부모의 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교육일 경우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의 변화 추세 및 비율

	Model 1 (A)	Model 2 (B)	Model 1에서 Model 2로 변환에 따른 계수의 변화 비율 (A-B)/A(%)
한국	5.30	1.77	66.6%
루마니아	24.86	7.68	69.1%
헝가리	19.05	6.77	64.5%
그리스	16.96	6.96	59.0%
슬로바키아	15.89	6.37	59.9%
이탈리아	15.07	6.41	57.5%
슬로베니아	14.87	8.17	45.1%
벨기에	14.45	5.36	62.9%
스페인	14.19	7.49	47.2%
프랑스	11.06	5.25	54.7%
오스트리아	9.05	4.79	47.1%
스웨덴	7.64	3.92	48.7%
핀란드	5.99	4.12	31.2%

요컨대, 우리나라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이러한 교육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녀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적고,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역시 적으며,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에 의존하는 비율 역시 낮은 북구 국가들(핀란드, 스웨덴)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히려 루마니아나 헝가리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 혹은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되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 자녀 본인의 학력이나 부모의 학력이 자녀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는 점은 예상외의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7절 맺음말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시점에서의 성취 수준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향상도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 학력은 가구 소득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과정을 일반고, 전문고(실업고), 특목고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가정 배경에 따른 진학률 또는 진학가능성은 상당 수준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적을 통제된 후에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SES)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성취 수준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SES 수준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진학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목고 진학은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가정 배경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격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학생과 대졸 이상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40개국 가운데 11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과 대졸 이상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15번째로 큰 수준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의 수준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학생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 노력, 공부시간, 과외 시간의 영향력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과외

시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수업 경험의 차이도 학생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학생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기 보다는 학생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매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이나 직업 지위 획득에서의 격차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이러한 교육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녀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적고,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역시 적으며,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에 의존하는 비율 역시 낮은 북구 국가들(핀란드, 스웨덴)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루마니아나 헝가리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 혹은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되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 자녀 본인의 학력이나 부모의 학력이 자녀 직업의 사회경제지수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점은 예상외의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격차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에서의 불평등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어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학교 교육이 재생산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교육 부문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보상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학습과 교육 활동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 개발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과 독립적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비교 분석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교육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학교 교육의 영향력은 상위 계층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하위 계층,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요컨대, 저소득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지원 노력은 이들 학생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일과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신영석·이태진·강은정·김태완·최현수·임완섭(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혜·김미숙·이영·남기곤·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5-27.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변수용(2006), “가정배경이 상급 학교 진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3-56,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류방란·김성식(2006a), “교육 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1-4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2006-22.
- _____ (2006b), “교육 격차의 실상: 가정의 교육 지원과 학교경험의 차이”,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60-82, 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 공동세미나.
- _____ (2006c),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7-2.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

- 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오호영(2006),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 Paper 2006-7.
-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이성균(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동』, 울산대학교 출판부.
- 장상수(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2(2): 118-146.
-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33(2): 75-107.
- 주현, 조덕희(2006),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6-41, 산업연구원
- 한준·한신갑(2006),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통해 본 대학간 불평등」,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 홍장표(2007), 「혁신과 통합의 산업정책 모색」 (미발표논문).
- Beck, U.(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ourdieu, P. and J. Passeron(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2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Bowles, S and H.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Y.: Basic Books, Inc., Publishers.
- Coleman J. S.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ields, G. S.(2003),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and Its Change: A New Method, wit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Worker Well Being and Public Policy* 22:1-38.
- Gang, I. N., et al(forthcoming), "Poverty in Rural India: Caste and Trib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 Iannelli, C.(2002), "Parental Education and Young People's Educational and Labour Market Outcomes: A Comparison across Europe", Mannheimer Zentrum für Europäische Sozialforschung. Working Paper No. 45.
-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Discussion paper FS I* pp.98-206.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Berlin.
- Thrane C.(2006), "Explaining educational-related inequalities in health: Mediation and moderator models", *Social Science & Medicine*; 62: 467-478.
- World 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World Bank.
- Yun, M. S.(2004), "Decomposition Differences in the First Moment," *Economics Letters*, 82: 273-278.

